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2019. 8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증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8.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충청남도 재정 및 충청남도의회 현황	 9
제1절 충청남도 일반 현황	11
1. 충청남도 지역 및 인구 현황	11
2. 충청남도 경제 현황	13
제2절 충청남도 재정 현황	15
1. 예산규모	15
2. 재정 여건	18
3. 재정운용계획	20
제3절 충청남도의회 현황	21
1.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	21
2.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현황	23
 제3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실태	 27
제1절 예·결산분석 조직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9
1. 조직 운영 현황	29
2. 조직 운영의 문제점	33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35
1. 조사 개요	35
2. 조사 결과	36

제4장 사례조사	53
제1절 조사 개요	55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57
1.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57
2. 국회의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	79
3. 해외 사례	84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92
1. 특징 정리	92
2. 시사점	96
 제5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방향	 99
제1절 기본방향	101
1. 충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조직의 필요성	101
2. 내·외부 여건 분석에 기반한 충남 모델 정리	102
3. 충청남도의회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	104
제2절 예·결산분석 조직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	106
1. 조직 및 인력 개선 방향	106
2. 제도적 지원 방향	116
3. 예·결산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	121
 제6장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모형 및 사례	 123
제1절 예산 분석 모형	125
1. 예산분석의 기본 방향	125
2. 예산분석의 대상	126
3. 예산분석의 방법	127
4. 예산분석의 내용	128
제2절 사례1: 저출산 대책 사업	129
1. 예산	129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130
3. 분석의견	135

제3절 사례2: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	141
1. 예산	141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142
3. 분석의견	152
제4절 사례3: 고교무상교육 현황 및 향후 자원부담	154
1. 예산	154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155
3. 분석의견	158
 [부록 : 설문지]	 161

표 목 차

[표 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11
[표 2]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및 세대 현황(2018년 기준)	12
[표 3]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	13
[표 4] 시도별 고용 현황	14
[표 5] 시도별 실업률 현황	14
[표 6] 2019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	15
[표 7] 연도별 세입·세출 예산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	15
[표 8]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16
[표 9] 충청남도 연도별 세부사업 수 추이	16
[표 10]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규모 추이	17
[표 11] 기관별 세입세출 예산규모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18
[표 12]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18
[표 13] 2019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19
[표 14]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19
[표 15] 연도별 재정전망	20
[표 16] 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 현황	21
[표 17] 상임위원회 현황	22
[표 18] 특별위원회 현황	23
[표 19] 의회사무처 직원 현황	24
[표 20]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배치 현황	24
[표 21] 의회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25
[표 22] 입법예산정책담당관 현원	29
[표 23] 예·결산분석 조직별 정원 및 현원	30
[표 24] 예산분석팀 사무분장 내역	31
[표 25] 예산조사팀 사무분장 내역	32
[표 26] 전문위원 소관 사무	34
[표 27] 응답자 성별 분포	36
[표 28] 응답자 연령 분포	37
[표 29]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	37

[표 30] 예·결산 분석조직의 운영에 관한 만족도	38
[표 31] 예·결산 분석조직의 인원 증원 및 과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	38
[표 32] 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39
[표 33]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 의견	40
[표 34]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58
[표 3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68
[표 36]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74
[표 37]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77
[표 38]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 현황 비교·정리	92
[표 39]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현황	95
[표 40]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중기 1안의 업무분장	108
[표 41]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중기 2안의 업무분장	112
[표 42]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장기안의 업무분장	115
[표 43] 예산분석 부서간 담당 역할 및 인력 현황	119
[표 44] 예산분석 사례 유형과 충청남도의회 방향	126

그림 목 차

[그림 1] 의회사무처 조직도	23
[그림 2] 의회사무처 예·결산분석 조직	29
[그림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57
[그림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63
[그림 5] 서울특별시의회 비용추계 절차도	64
[그림 6]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도	65
[그림 7] 서울특별시의회 비용추계서 서식	65
[그림 8]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67
[그림 9]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70
[그림 10] 경기도의회 비용추계서 서식	71
[그림 11]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73
[그림 12]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75
[그림 13]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78
[그림 14]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80
[그림 15] 국회 비용추계서 서식	83
[그림 16] 위스콘신주 입법재정국의 조직도	85
[그림 17] 미국 의회예산처의 조직도	90
[그림 18]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의 근거	104
[그림 19] 충청남도의회 비용추계서 서식(안)	109
[그림 20]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중기 1안	110
[그림 21]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중기 2안	113
[그림 22]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장기안	116
[그림 23] 예·결산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	122
[그림 24]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안)	128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의회의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활성화 필요

-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지진·폭염·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함
-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도의회가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 높아짐

■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다양화, 예산구조의 복잡화, 재정운영의 전문화는 날로 높아짐
 - 충청남도의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는 2019년에 10조원을 넘어섬
 - 도의회는 짧은 법정기한 내에 대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상황임
- 전통적인 의회사무처 기능만으로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움
- 예·결산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충청남도는 예·결산 심사 등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 예·결산분석 조직인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을 신설함
 - 이를 통해, 예·결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예·결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이는 도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1인 1상임위 구조로 인해 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전문위원실 등 기존 조직과 역할 중첩이 우려되고 있음
- 효율적 예·결산분석을 위해 분석조직의 역할 명확화와 유사기능 부서와의 역할 분담 등 기능 재정립 필요
- 또한, 예·결산분석 조직이 정착되어가는 초기 단계로서, 인력, 수행업무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임

■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와 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역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배경은 지방의 예산·결산업무가 집행부 중심으로 기울어지도록 함
 - 지방자치제도는 1962년에 중단된 이후 1991년에 복원되어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지 못함
 -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 예산과 결산은 주민의 관점보다는 집행부의 관점에서 실행되는 방식이 고착화됨
-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개되고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재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예산과 결산에서 집행부 중심적 관점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채로 선발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높이기 어려움
 -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쉽지 않음
- 이러한 한계는 도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의회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함. 즉, 의회는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과 결산을 바라보고 집행부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함
- 충청남도 예·결산분석 조직은 의회의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도민의 관점에서 예·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 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 제시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운영방향 제시
 - 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예·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예·결산분석 조직 사례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시사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방향 설정

■ 충청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사례 제시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예산분석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주요 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충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시 견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모델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년을 기준년도로 함
- 향후 5~10년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방향 수립

■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 국내외(국회, 타 시도 의회 등) 기관의 예산분석·비용추계 등 사례 분석
 - 예산분석 방법·범위·시기와 분석 보고서 활용방안 제시
-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조사) 조직의 운영방향
 - 조직, 인력운용, 기능 및 역할, 업무의 범위
 - 연차별 운영·발전 방안
 - 예산분석 부서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역할 분담
 - 예·결산 분석에 필요한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등
- 충청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사례 제시
 - 향후 충남도 예·결산 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정된 3개 주제에 대해 분석
 - 분석주제: ① 저출산 대책 사업, ②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 ③ 고교무상교육 현황 및 향후 재원부담
 - 분석내용은 예산, 현황, 사업내용, 분석의견 등으로 구성

2. 연구의 방법

■ 문헌자료 분석

- 지방의회 예·결산분석 관련 문헌 수집과 분석

■ 사례조사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사례 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

- 예·결산분석 조직 운영 및 예산분석 전문가 대상 자문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제2장 충청남도 재정 및 충청남도의회 현황

제1절 충청남도 일반 현황

제2절 충청남도 재정 현황

제3절 충청남도의회 현황

제1절 충청남도 일반 현황

1. 충청남도 지역 및 인구 현황

■ 충청남도 지역현황

- 충청남도의 총 면적은 8,226㎢로 전국 총 면적(100,295㎢)의 8.6%를 차지함
- 충청남도는 8개 시, 7개 군의 1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군별 면적은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부여군 순으로 크게 나타남

[표 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2018.10월 기준)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리동		면적 (㎢)	가구 (세대)	인구 (명)
	읍	면	동	동	리	리	동			
계	25	136	46	123	1,970	4,374	1,331	8,226.37	940,235	2,124,524
천안시	4	8	18	30	148	452	701	636.08	272,567	644,577
공주시	1	9	6	27	161	248	131	864.21	49,880	107,463
보령시	1	10	5	10	101	234	119	573.9	47,664	102,143
아산시	2	9	6	19	143	417	142	542.62	131,204	311,960
서산시	1	9	5	14	125	270	97	741.3	74,765	173,717
논산시	2	11	2	11	173	423	66	555.18	56,680	120,527
계룡시	-	3	1	1	14	68	20	60.72	15,818	43,757
당진시	2	9	3	11	138	222	55	704.44	75,472	167,810
금산군	1	9	-	-	106	257	-	577.21	25,556	53,282
부여군	1	15	-	-	191	435	-	624.53	33,201	68,271
서천군	2	11	-	-	172	3154	-	365.71	26,459	54,172
청양군	1	9	-	-	115	183	-	479.11	16,049	3,979
홍성군	3	8	-	-	141	350	-	442.87	45,344	101,192
예산군	2	10	-	-	177	312	-	542.66	37,962	80,240
태안군	2	6	-	-	65	188	-	515.83	31,614	63,434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8)



■ 충청남도 인구현황

- 2018년 기준 충청남도 인구는 2,180,925명(외국인 제외)이며, 시군의 인구 규모는 천안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 순이며 4개 시군의 인구가 충남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946명이며, 서천군은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1.8%로 높고 청양군 31.3% 순으로 나타남

[표 2]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및 세대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세대)

구분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65세이상 고령자 수	외국인 (인구수)
충청남도	2,180,925	263,434	2.36	362,946	64,155
천안시	650,402	49,393	2.47	60,562	18,871
공주시	110,428	47,407	2.24	25,008	1,996
보령시	106,001	129,188	2.24	23,622	2,803
아산시	327,657	72,469	2.54	36,969	16,204
서산시	175,769	56,679	2.43	29,012	4,091
논산시	126,192	15,647	2.23	28,630	3,952
계룡시	44,174	74,586	2.82	4,175	207
당진시	172,816	25,440	2.32	28,386	5,377
금산군	55,807	32,999	2.19	14,982	1,913
부여군	70,295	26,544	2.13	21,209	1,209
서천군	56,422	16,147	2.13	17,931	1,247
청양군	33,426	44,833	2.07	10,458	589
홍성군	103,766	37,489	2.31	21,895	2,196
예산군	82,494	31,244	2.20	22,601	2,156
태안군	65,276		2.09	17,506	1,344

주 : 총 인구는 외국인 포함한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 충남통계연보(2018)

2. 충청남도 경제 현황

■ 지역내 총생산(GRDP)

- 2017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는 124,419,192백만원 이고,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3%임
- 2017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성장함

[표 3]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내총생산 (GRDP)	99,154,337	105,002,395	111,265,147	117,074,893	124,419,192
GRDP 성장률	4.0%	5.9%	6.0%	5.2%	6.3%
1인당 GRDP	47	50	52	54	57

주 1) 지역내총생산(GRDP)는 당해년가격임.

2)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58,302,557백만원으로 전체 GRDP 에서의 비중은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8,701,736백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7,652,262백만원으로 6.2%를 차지함
- GRDP의 규모가 가장 작은 분야는 광업으로서 2017년 기준으로 189,605백만 원임

■ 충청남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 충청남도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2.3%로 전국대비 소폭 높은 수준 (60.8%)임
- 고용률은 2011년 61.0%에서 소폭 증가하여 2017년 62.3% 수준임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67.9%로 전국에서 제주도(76.0%), 충청북 도(69.1%) 다음으로 높은 수준



[표 4] 시도별 고용 현황

(단위 : %)

시도별	2011		2013		2015		2017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전국	59.3	63.9	59.8	64.6	60.5	65.9	60.8	66.6
서울특별시	60.0	64.7	59.9	65.0	60.0	65.5	60.2	66.4
부산광역시	54.5	60.2	56.1	61.8	56.3	62.7	56.3	63.4
대구광역시	56.8	61.5	57.9	63.2	59.4	65.4	58.8	65.0
인천광역시	60.7	65.0	61.3	65.3	61.1	65.9	61.7	67.3
광주광역시	56.6	60.7	57.2	61.6	58.5	63.2	59.0	63.8
대전광역시	56.9	61.1	57.5	62.0	59.6	64.6	58.9	64.0
울산광역시	59.8	63.1	59.0	62.1	59.0	62.5	59.8	63.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61.2	64.8
경기도	59.3	63.9	60.2	64.8	61.7	66.8	62.1	67.9
강원도	56.2	62.0	56.3	62.6	57.9	64.3	61.0	67.1
충청북도	59.5	64.6	60.0	65.2	62.4	68.3	62.6	69.1
충청남도	61.0	66.5	62.7	67.4	62.3	67.9	62.3	67.9
전라북도	57.6	62.2	58.6	63.9	59.2	64.6	58.6	64.4
전라남도	62.3	67.2	62.6	67.5	62.8	67.9	62.1	66.8
경상북도	61.9	65.9	62.1	66.6	62.4	67.6	62.5	67.9
경상남도	60.7	65.2	60.3	65.2	60.6	66.0	60.9	66.4
제주도	66.0	70.6	66.4	70.7	68.5	72.9	70.9	76.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충남의 실업률은 2017년 2.8%로 전국대비 낮은 수준(3.7%)
 - 실업률은 2011년 2.4%에서 2015년 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8%로 소폭 감소세에 있음

[표 5] 시도별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2011		2013		2015		2017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국	863	3.4	808	3.1	976	3.6	1,023	3.7
충청남도	26	2.4	32	2.8	43	3.5	33	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2절 충청남도 재정 현황

1. 예산규모

■ 세입·세출예산 규모

- 2019년 충청남도 세입·세출 총계는 7,264,644백만 원임
 - 일반회계는 5,740,000백만 원으로 총계의 79%를 차지함

[표 6] 2019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64,644 (100%)	5,740,000 (79.0%)	0	529,423 (7.3%)	995,221 (13.7%)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충청남도 세입·세출 총계는 2015년 5,228,921백만원에서 2019년 7,264,644백만원으로 약 2조원이 증가함
 - 연평균 8.6%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표 7] 연도별 세입·세출 예산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5,228,921	6,001,370	6,241,561	6,647,717	7,264,644	8.6%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세입재원별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수입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조금이 2,949,136백만 원으로 전체 재원의 51.4%를 차지함
- 다음으로 지방세 수입이 1,849,396백만 원으로 전체 재원의 32.2%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 수입이 764,933백만 원으로 13.3%를 차지함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의존재원이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8] 일반회계 세입자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자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217,000	100	4,557,000	100	4,735,000	100	5,173,500	100	5,740,000	100
지방세	1,197,000	28.4	1,487,000	32.6	1,550,400	32.7	1,728,276	33.4	1,849,396	32.2
세외수입	54,768	1.3	71,201	1.6	80,869	1.7	74,976	1.5	81,383	1.4
지방교부세	550,000	13.0	536,587	11.8	569,740	12.0	605,374	11.7	764,933	13.3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보조금	2,360,335	56.0	2,376,070	52.1	2,460,473	52.0	2,701,249	52.2	2,949,136	51.4
지방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897	1.3	86,143	1.9	73,518	1.5	63,624	1.2	95,152	1.7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충청남도 재정사업 수 추이

- 예산의 증가와 함께 재정사업 수 또한 증가함
- 전체사업수는 2019년 기준 2,655개이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표 9] 충청남도 연도별 세부사업 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사업수	1,789	2,607	2,499	2,606	2,655
자체사업수	1,056	1,359	1,303	1,317	1,442
보조사업수	733	1,248	1,196	1,091	1,213

주) 2019년은 5월 말 기준

자료: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

- 일반회계 예산을 세출분야별로 구분하여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조 8,880억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3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높았음
- 반면,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32억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0.6%만을 차지함

[표 10]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217,000	100	4,557,000	100	4,735,000	100	5,173,500	100	5,740,000	100
일반공공행정	360,500	8.6	500,739	11.0	514,683	10.9	599,716	11.6	616,613	10.7
공공질서 및 안전	229,934	5.5	204,904	4.5	115,690	2.4	118,923	2.3	136,156	2.4
교육	257,805	6.1	295,392	6.5	318,579	6.7	333,193	6.4	366,597	6.4
문화 및 관광	184,370	4.4	209,503	4.6	239,707	5.1	224,669	4.3	224,008	3.9
환경보호	374,310	8.9	356,608	7.8	327,531	6.9	339,076	6.6	385,839	6.7
사회복지	1,205,333	28.6	1,282,719	28.2	1,359,341	28.7	1,617,896	31.3	1,880,307	32.8
보건	83,405	2.0	115,284	2.5	109,295	2.3	125,935	2.4	132,922	2.3
농림해양수산	768,800	18.2	794,076	17.4	853,552	18.0	900,908	17.4	918,583	16.0
산업·중소기업	70,142	1.7	95,207	2.1	101,196	2.1	90,631	1.8	128,882	2.3
수송 및 교통	142,270	3.4	153,415	3.4	142,159	3.0	154,533	3.0	164,245	2.9
국토 및 지역개발	164,976	3.9	156,997	3.5	240,775	5.1	233,743	4.5	271,680	4.7
과학기술	12,784	0.3	12,533	0.3	10,762	0.2	17,805	0.3	3,214	0.1
예비비	52,162	1.2	52,909	1.2	57,552	1.2	53,349	1.0	77,769	1.4
기타	310,208	7.4	326,715	7.2	344,177	7.3	363,122	7.0	433,185	7.6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기관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충청남도에 이어 교육청이 3조 4,5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순서로 많음
- 공사·공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함



[표 11] 기관별 세입세출 예산규모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계	10,785,884	11,442,648	656,763	6.1
충청남도	6,647,717	7,264,644	616,927	9.3
교육청	3,263,711	3,451,696	187,984	5.8
공사·공단	443,275	274,700	-168,575	△38.0
출자·출연기관	431,181	451,608	20,427	4.7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2. 재정 여건

■ 재정자립도

- 2019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13%임
- 충청남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에 27.4%에서 2019년에 32.1%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12]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7.42 (26.05)	32.77 (30.78)	32.57 (30.93)	32.75 (31.46)	32.13 (30.39)

주)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측정치임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통합재정수지¹⁾

- 2019년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¹⁾은 △79,4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5,841억원(증10.8%) 증가한데 반해, 통합재정규모는 6,072억원(증11.1%)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음

1)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 용자금 지출이 늘어나 전년대비 순 용자 규모가 다소 증가했고, 이전경비 등 경상지출과 자산 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이는 2019년도 충청남도 재정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301억원(증45.7%)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크게 호전되었음

[표 13] 2019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계	6,008,932	6,106,625	43,831	25,560	△18,271	95,970	6,088,354	△79,422	16,548
일반 회계	5,650,588	5,531,080	7,912	0	△7,912	80,000	5,523,168	127,420	207,420
기타 특별 회계	343,077	529,423	0	0	0	15,970	529,423	△186,346	△170,376
기 금	15,267	46,122	35,919	25,560	△10,359	0	35,763	△20,496	△20,496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 통합재정수지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임. 그에 반해, 통합재정수지2는 2015년에만 적자상태이고, 2016년부터 재정흑자 상태임

[표 14]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12,453	△314,811	△64,755	△56,321	△79,422
통합재정수지 2	△20,232	10,923	414,880	9,558	16,548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3.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계획기간(5개년) 중 총 재정규모는 42조 98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예상됨
- 세출 분야에서 사업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5.20%로 예상되어 사업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15]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4.40%
자체수입	2,111,651	2,214,313	2,316,586	2,407,245	2,519,440	11,569,235	4.50%
이 전 수 입	4,164,245	4,386,875	4,618,813	4,867,047	5,131,870	23,168,850	5.40%
지방채	134,800	84,800	173,080	173,080	173,080	738,840	6.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5,406	1,295,170	1,300,849	1,312,218	1,329,306	6,532,949	0.60%
세 출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4.40%
경 상 지 출	1,716,226	1,670,168	1,769,762	1,797,594	1,819,093	8,772,843	1.50%
사 업 수 요	5,989,875	6,310,991	6,639,567	6,961,996	7,334,603	33,237,032	5.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자료: 충청남도 2019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제3절 충청남도의회 현황

1.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

■ 제11대 의원정수

- 제11대 의원정수는 42인(비례대표 4인 포함)으로 제10대에 비해 2인 증가 하였으며, 98년 이후 40인 수준임

[표 16] 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제4대 (91~95)	제5대 (95~98)	제6대 (98~02)	제7대 (02~06)	제8대 (06~10)	제9대 (10~14)	제10대 (14~18)	제11대 (18~22)
계	866	970	764	755	738	843	794	824
서울	132	147	114	112	106	114	106	110
부산	51	61	54	48	47	53	47	47
대구	28	41	32	30	29	34	30	30
인천	27	35	32	32	33	38	35	37
광주	23	26	20	22	19	26	22	23
대전	23	26	20	22	19	26	22	22
울산	-	-	20	22	19	26	22	22
세종	-	-	-	-	-	-	15	18
경기	117	136	106	114	119	131	128	142
강원	54	58	52	47	40	47	44	46
충북	38	40	30	30	31	35	31	32
충남	55	61	40	40	38	45	40	42
전북	52	58	42	40	38	43	38	39
전남	73	75	60	56	51	42	58	58
경북	87	92	66	63	55	63	60	60
경남	89	94	56	55	53	59	55	58
제주	17	20	20	22	41	41	41	38

자료: 행정안전부(2015). 지방의회백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

-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의 6개로 구성됨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상임 위원장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
-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임

[표 17] 상임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1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8	공보관, 공동체정책관, 기획조정실, 미래산업국,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8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8	경제통상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8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위원회	9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주)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5인과 정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4~6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자료: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nam.go.kr)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함
- 정해진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됨

[표 18] 특별위원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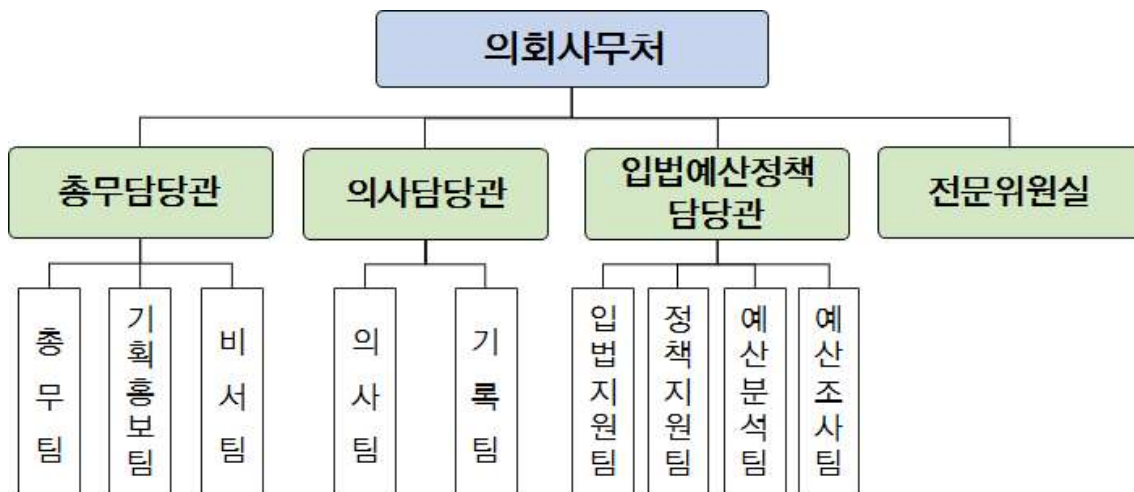
위원회명	위원수	소관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등과 기금결산을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9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공교육, 일제잔재 등에 관한 사항

자료: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nam.go.kr)

2.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현황

■ 의회 사무처 조직 현황

- 의회사무처는 3담당관 9팀과 6상임위원회에 7전문위원실이 있음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예산정책담당관으로 구성됨
 - 각 담당관 별로 2개~4개의 팀이 배치됨
 - 전문위원실은 6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에 각 1명의 수석전문위원과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음



[그림 1] 의회사무처 조직도

주) 2019년 8월 기준

- 2019년 8월 현재 사무처 정원은 123명이고 현원은 125명임
 - 현재 총무담당관에 31명, 의사담당관에 18명,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 34명,



전문위원실에 42명이 배치되어 있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20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19] 의회사무처 직원 현황

(단위: 명)

부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예산 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	계
현원	31	18	34	42	125

자료: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출자료

-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도의회의 입법조사 및 정책분석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임
 - 정책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 급, ‘다’ 급, ‘라’ 급으로 구분됨
 - 정원은 21명이고 2019년 8월 현재 현원은 20명임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정책지원팀에 소속되어 있음
 - 그러나 나급 1명만 정책지원팀에 배치되어 있고, 다급 4명과 라급 15명은 5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됨

[표 20]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배치 현황

(단위: 명)

계	입법예산 정책담당관 정책지원팀	행정자치 위원회	문화복지 위원회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 소방위원회	교육 위원회
20	1 (나)	4 (다1, 라3)	3 (다1, 라2)	4 (라4)	4 (다1, 라3)	4 (라4)

■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됨
 - 총무담당관은 총무분야와 기획홍보분야의 사무를 담당함
 - 의사담당관은 의사분야와 기록분야의 사무를 담당함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입법분야, 정책분야, 예산분석·조사분야의 사무를 담당함

[표 21] 의회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부서	사무분장 내용
총무담당관	[총무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문서·보안·공인관리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바.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사. 장비관리, 물품의 수급관리 및 의회 청사의 시설 관리 아. 세외수입 관리 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차.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카. 의정동우회 운영지원 타. 의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분류 및 총괄관리 파. 그밖에 다른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
	[기획홍보 분야] 가. 의회운영 및 홍보업무 조정 및 총괄 나. 각종연설문, 대담 및 홍보자료 작성 다. 의회활동 관련 보도 및 홍보자료 수집·발간 라. 의정활동 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 마. 의회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의장 및 사무처장이 의회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기획
의사담당관	[의사분야] 가. 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마.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 바.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통보 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아.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자.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차.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카.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파.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기록분야] 가. 속기업무의 기획 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 보관, 배부 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마.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입법예산	[입법지원분야]



	가. 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나. 의회 입법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다. 의원발의 법규 검토 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마. 법령 제·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의 자료수집 및 검토 바. 의회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부서의 지정 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 개선안 검토 아. 중요 부의안건 검토 자. 의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차. 의회관련 각종 자료 및 사료의 수집·발간·보존·관리·열람에 관한 사항 카.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정책담당관	[정책지원분야]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나.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다. 의회 분야 자치분권 제도 발전 방안 연구 라. 의회 분야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마.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 제도 운영 지원 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자. 입법·정책 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지원 차.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 운영 지원 카.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성과분석 총괄 타. 의원 연구모임 운영 총괄 파.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총괄 하. 입법정책연구원 운영 및 평가 지원 거. 그밖에 정책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예산분석·조사분야	[예산분석·조사분야] 가. 도·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사항의 조사 및 분석 라. 도·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공사의 주요사업 분석 마. 예산·재정 현안 분석 바.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사. 예·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검토 아. 그밖에 예산정책 관련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전문위원	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나.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다.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라.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마.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실태

제1절 예·결산분석 조직 운영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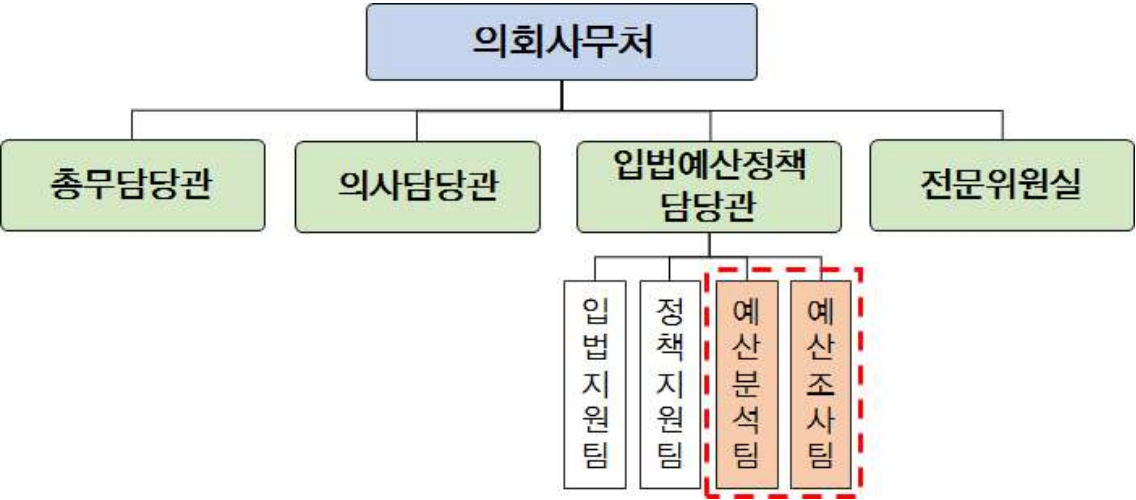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제1절 예·결산분석 조직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조직 운영 현황

■ 조직 구성

- 충청남도는 도의회의 예·결산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아래에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을 신설함



[그림 2] 의회사무처 예·결산분석 조직

■ 인력 구성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의 현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 20명을 포함하여 34명임

[표 22] 입법예산정책담당관 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운영	시간 선택제
현원	34	1	4	5	2	-	1	1	20

-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을 설치하면서 6명의 인력을 충원함
 - 5급 팀장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였고, 팀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함



-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의 인력의 정원 및 현원은 다음과 같음

[표 23] 예·결산분석 조직별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계	8 (6)	2 (2)	4 (3)	2 (1)
예산분석팀	4 (3)	1 (1)	2 (1)	1 (1)
예산조사팀	4 (3)	1 (1)	2 (2)	1 (0)

주) ()는 현원을 의미함.

- 예산분석팀에는 팀장 1명(임기제공무원),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1명으로 4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6급에 1명만 배치됨
- 예산조사팀에는 팀장 1명(임기제공무원), 행정 6급 2명, 7급 1명으로 4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급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예산조사팀의 6급 정원 2명 중 1명은 교육행정임
 - 6급 1명은 현재 소방직이 배치되어 있음

■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담당사무

- 충청남도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결산분석 조직의 구조를 설계함에 따라,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으로 구성됨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는 예산조사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의 3개 팀이 설치됨
- 예산분석팀은 도 본청 예·결산안을 총괄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소관사항을 다루고 있음

[표 24] 예산분석팀 사무분장 내역

직위(직급)	분 장 사 무	비 고 (보직일)
예산분석 팀 장	○ 예산분석팀 업무 총괄 ○ 도 본청 예·결산안 총괄 분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결산안 분석	2019.3.21.
지방행정 주 사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결산안 분석 ○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 예·결산 업무계획 및 보고 작성	2019.1.21.
지방행정 주 사 보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결산안 분석 ○ 팀 일반사무 및 예산관리 등	2019.1.21.

주) 2019. 3. 21. 기준

자료: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사무분장 자료



- 예산조사팀은 교육청 예·결산안을 총괄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3개 위원회를 소관사항을 다루고 있음

[표 25] 예산조사팀 사무분장 내역

직위(직급)	분 장 사 무	비 고 (보직일)
예산조사 팀 장	○ 예산조사팀 업무 총괄 ○ 교육청 예·결산안 총괄 분석 ○ 교육위원회 소관사항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결산안 분석	2019.5.21.
지방교육 행정주사	○ 의회운영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사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결산안 분석 ○ 교육위원회 소관사항 업무지원 ○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 예·결산 분석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2019.1.1.
지방소방경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사항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안 주요사업 분석 -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성인지 예·결산안 분석 ○ 팀 일반사무 및 예산관리 등	2019.2.20.

주) 2019. 5. 21. 기준

자료: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사무분장 자료

2. 조직 운영의 문제점

■ 불명확한 조직 구분

- 2019년 초에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이 신설되었으나, 두 조직 간 사무 구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차이만 있을뿐, 수행업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은 동일하게 예산 및 결산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조사팀의 명칭은 수행업무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않음

■ 인력과 업무의 부조화

- 현재 팀장 2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있으나 4인의 팀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됨
- 예·결산분석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장기간의 업무수행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관련지식을 축적해야 하는 함
-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분석업무에 적합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보통 2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예·결산분석 조직의 견제와 감시 관점 불확실

- 위원회별 예·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함
-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 인사구조에 따라 다시 본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본청과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관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전문위원실과의 사무 중복

- 전문위원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분석 조



직과 업무중복 가능성이 있음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음

[표 26] 전문위원 소관 사무

구분	분장 업무
전문위원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자료: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2018.12.31. 개정) 제8조 제4항

- 전문위원실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받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기간은 약 2주 정도로서,²⁾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임
-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기는 어렵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개별사업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실의 이러한 검토보고는 예·결산분석 조직이 사업별 예산분석을 실시하기 전의 전반적인 예산현황 조사 보고서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결산분석 부서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27~1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12.7~12.12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와 한계점 분석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 수집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 도출

2) 조사대상

- 예·결산분석 조직의 수행업무에 대한 주요 관계자로 조사대상 선정
-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예·결산분석 업무와 관계성이 높은 의원을 대상으로 5인 선정
 - 도의회 의원은 예·결산분석 업무의 주요 수요자
 - 도의회의 의장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의견조사의 대표성 확보
- 예·결산분석 업무의 수행자
- 충남도청의 예·결산분석 업무 주요 관계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팀, 운영지원과 경리팀의 부서장

3) 조사기간

- 2019년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약 1개월 간 실시



4) 조사방법

- 의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분석
 - 42인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23부를 회수함 (54.8%의 회수율)
 - 설문지를 통계분석하여 분석결과 도출
- 면대면 인터뷰조사 및 전화인터뷰 실시
 - 면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한 대상 1인에 한정하여 전화인터뷰 실시

5) 조사내용

- 조사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산 조사·분석 조직 설립에 관한 필요성 인식 정도
 - 조직운영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조직운영의 개선과제 및 향후 조직운영 방향
- 이상의 세 가지 조사내용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의 특성에 맞춰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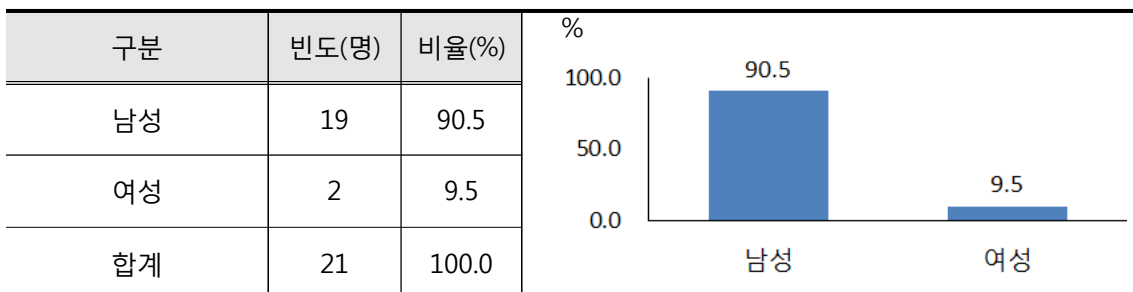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1) 의원 대상 설문 분석결과

■ 응답자 성별 분포

- 설문에 응답한 23명의 응답자 중 성별을 밝힌 응답자는 21명이고 그 중 남성이 90.5%(19명)이고 여성이 9.5%(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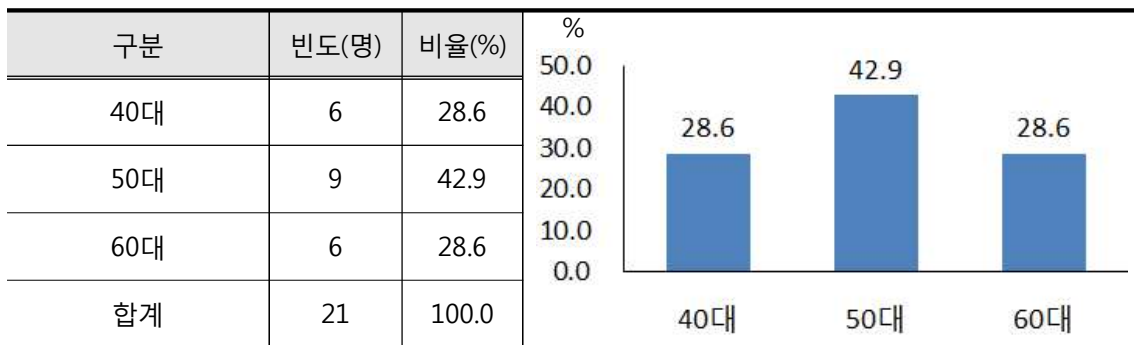
[표 27] 응답자 성별 분포



■ 응답자 연령 분포

- 설문에 응답한 23명의 응답자 중 연령대를 밝힌 응답자는 21명이고 그 중 40대가 28.6%, 50대가 42.9%, 60대가 2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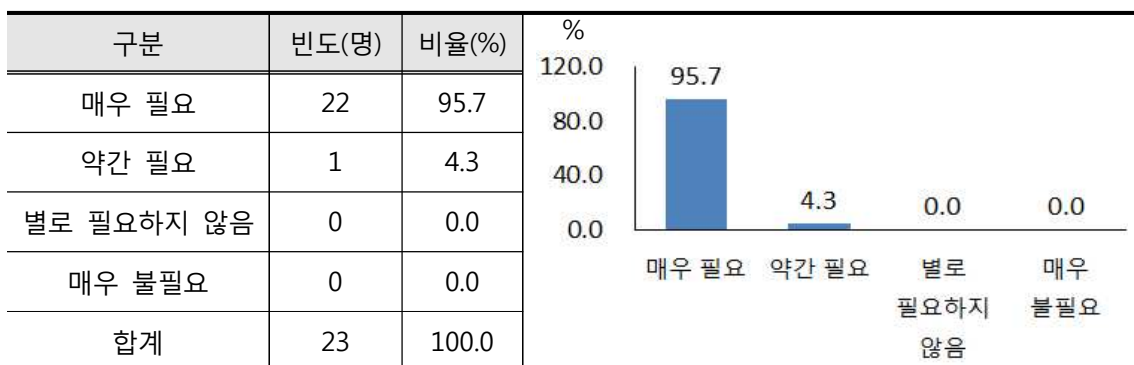
[표 28] 응답자 연령 분포



■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

- 충남도의회에 신설된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00%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고, 95.7%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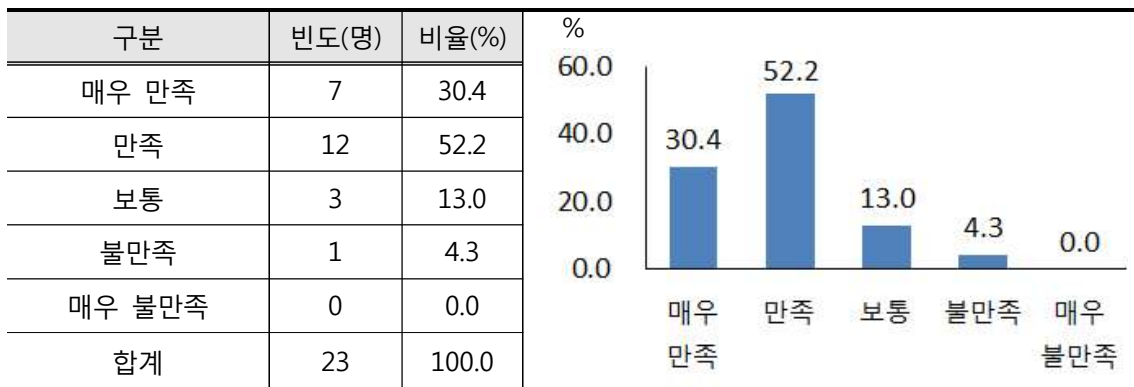
■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에 관한 만족도

- 충남도의회에 2019년 1월에 예·결산분석 조직이 신설된 이후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8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그에 반해, 불만족 응답 비율은 4.3%(1명)로 매우 적게 나타남
- 불만족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 심도 있는 분석이 아쉽다’ 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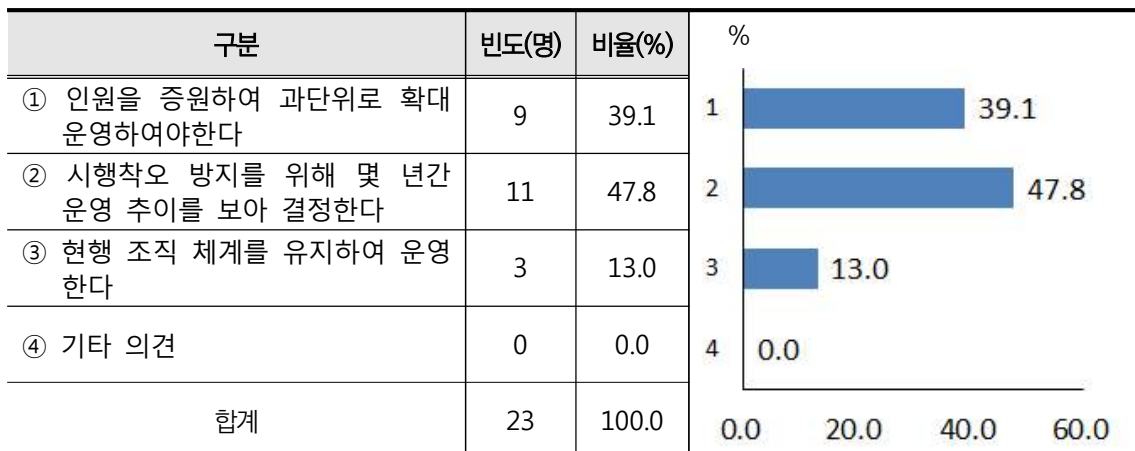
[표 30] 예·결산 분석조직의 운영에 관한 만족도



■ 예·결산 분석조직의 인원 증원 및 과단위 확대

- 예·결산 분석조직의 인원을 증원하여 별도 과단위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문함
 - 현재 예산분석 업무 조직은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 2개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당 1개 상임위원회를 맡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 예·결산 분석조직의 인원 증원 및 과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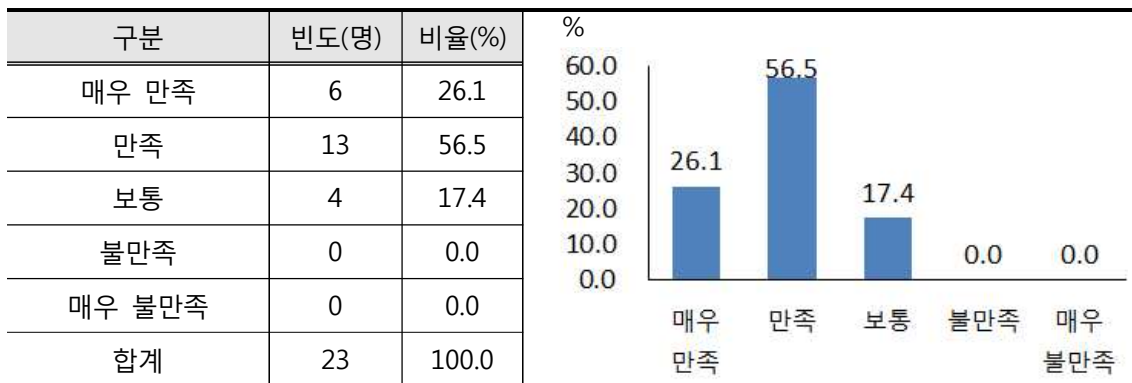


- 응답자의 47.8%(11명)은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몇 년간 운영 추이를 보아 결정한다’고 응답하였고, 39.1%(9명)은 ‘인원을 증원하여 과단위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3명)은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한다’고 응답함
- 예·결산 분석조직의 인원 및 조직 확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 충남도의회 예·결산 분석조직은 조직 설립 이후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작성함
- 그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 응답 비율은 82.6%(19명)로 나타났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0%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 비율은 17.4%(4명)로 나타남
- 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분석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 의견

- 현재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 분석·조사를 위하여 직접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1명)은 ‘지방자치법 제40조 ‘폐회 중 의원으로 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 추진’에 응답하였고, 13.6%(3명)는 ‘집행부의 협조·협력을 구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 추진’에 응답하여 63.6%(14명)가 현재의 여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반해, 31.8%(7명)은 ‘위법성 논란은 있으나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추진’에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활용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해 강제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이나 협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 의견

구분	빈도(명)	비율(%)	%
① 집행부의 협조·협력을 구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 추진	3	13.6	1 13.6
② 지방자치법 제40조'폐회 중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 추진	11	50.0	2 50.0
③ 위법성 논란은 있으나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추진	7	31.8	3 31.8
④ 기타 의견	1	4.5	4 4.5
합계	22	100.0	0.0 20.0 40.0 60.0

■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방향

- 예·결산 분석 조직의 운영방향에 대해 주관식 질문을 제시한 결과, ‘현재 잘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향후 예산분석에 답아야 할 내용

- 향후 예산분석에 답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문할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국별 예산 배분과 과별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전체 예산이 실국에 배분될 때 필요에 맞게 배분·조정되어야 함
 - 과별 예산 배분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 자료가 도출되었으면 함
- 예·결산분석 조직의 예산분석 업무를 집행부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개방형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항목별 예산분석 시에 인구나 전체예산규모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제시했으면 좋겠음
- 성과예산의 성과와 설정된 목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필요함
- 예산안 분석시 결산 분석 내용이 부가되면 좋을 것 같음
 - 결산서에만 표시되는 이월 등을 참고하여 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환류 내용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예·결산분석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예·결산분석 조직이 설치되어 의원은 기존에 필요로 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족도가 높음
 - 예결산분석 자료의 필요성 인식은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공감하는 설문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17.4%는 보통 또는 불만족의 응답을 제시하였고, 분석보고서에 대해서도 17.4%가 보통 또는 불만족의 응답을 제시함



- 또한, 분석보고서의 심도 있는 분석 및 다양한 분석결과 제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이러한 설문결과는 의원들의 분석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질적 제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 의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결산분석 자료 제시 필요
 - 일부 의원은 분석보고서가 현재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예산 배정의 적절성, 집행 부진사업 분석 등 다양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인원 증원 및 조직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인원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인력 증원 필요
 - 예결산분석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업무이고 특정 인력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업무로서 일반 행정업무와 성격이 다름
 - 또한 이 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그러한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지 않게 됨

2) 의원 대상 인터뷰 조사결과

(1)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

- 현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은 높음
 - 다만, 예결산분석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조직의 필요성 인식정도는 달라질 것임
-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결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예·결산분석 조직을 신설하게 됨
 -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예결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이었음. 실질화시킬 필요에 의해 예결산분석 조직이 신설됨

- 예·결산 심의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에게는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은 더 높을 것임

(2) 조직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 (성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공급

- 과거에는 의원이 직접 예·결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위원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예·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해소됨
- 그에 따라, 도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

■ (문제점) 예·결산분석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 현재 예·결산분석 조직의 전문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팀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이지 못할 수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근무제로 인해 업무숙지기회가 부족함
 - 업무능력이 높더라도 본청에 소속되어 객관적 업무수행이 어려움
 - 일반직 공무원이 예·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입법, 예산업무는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 직할체제로 마련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함

(2) 조직운영 개선방향

■ 예·결산분석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 예·결산분석 조직에 임기제 공무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음
 - 업무특성상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조직구성원을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적절함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또한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여 외부공모에 의해 충원

될 필요가 있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을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전문화하여야 함
 - 국회의 입법예산전문기구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로 구분되어 있듯이, 충청남도의회 또한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구분하여야 함
 -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및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담당관은 예결산 분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분석보고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실시되면 전문자료에 의한 조례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임
-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업보조금 및 복지보조금에 관한 분석보고서, 민간위탁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관한 보고서 등
-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 등 분석보고서가 추가되면 좋을 것임
- 추경예산시 증액사업의 연혁에 관한 관리도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안심의 시기가 아닌 경우에도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분석내용이 단순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보다 인력이 증원되어야 함

■ 예·결산분석보고서 공유 및 환류

- 예·결산분석보고서가 활용되기 위해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브리핑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함
- 전체 상임위원회가 결산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결산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 예산편성심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의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함

■ 외부기관과의 협업구조

-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업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본청 관계조직 대상 인터뷰 조사결과

- 예·결산분석 조직의 필요성 및 신설에 대해서는 수긍함
 - 본청 사업부서에서 미흡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한다는 점에서는 수긍함
- 집행부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의회와 본청이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본청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업무 증가, 의원의 자료요구, 도정질의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가 적지 않음
 - 예를 들어, 본청 예산담당부서는 재원확보, 편성이 본래 업무였으나, 성인지 예산, 성과예산, 보조금심의 등 추가업무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업무에 대한 인력수급이 부족한 여건에서 추가적인 업무 요구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재정연감, 중기지방재정계획, 결산서 등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자료요구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었으므로, 정기적인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조사업무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예결산분석조직과의 업무중복의 여지가 있음
- 예·결산 분석조직이 장기적, 단계적으로 소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예결산분석 조직 대상 조사 결과

(1) 조직운영 현황

■ 충남의 현 상황

- 현재 충청남도는 예산분석, 비용추계 등 업무에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현재는 예결산분석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비용추계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의원의 수요에 맞춰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운영모델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의 조사분석 업무 수행

- 1인이 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도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팀장과 팀원의 업무구분 불명확

- 현재 예·결산분석 조직 팀장은 팀원과 동일하게 위원회를 맡아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팀장은 총괄업무에 보다 집중해야 하므로, 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팀명칭과 수행업무의 부조화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조직은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조직 모두 분석업무를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어 조직 간 업무차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2) 조직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 조직운영의 성과

- 2019년 초에 예산조사·분석 조직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하면서 결산분석 보고서와 추경 요약보고를 실시함
 - 2019년 도청 1회 추경 요약보고(2019.3)
 -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2019.5)
 - 2019년 교육청 1회 추경 요약보고(2019.5)
 - 2019년 도청 2회 추경 요약보고(2019.8)
- 이러한 보고서가 의원의 의정활동에 활용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 부재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실시되지 않음
- 현재 서울, 경기, 전남에서는 의회사무처 예·결산분석 조직에서 의원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 되지 않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의 객관적 관점 유지 어려움

- 일반직 공무원은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고 순환보직 원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집행부로 이동해야 함
- 그로 인해,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강화하기 어려움
- 이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일반직 공무원 직무경험과 수행업무 간 부조화

- 현재 예산조사·분석팀의 구성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분석보고서 작성경험이 거의 없음
 - 분석업무는 기존의 집행중심의 행정업무와 이질적임
 - 집행부에서 예산업무 경험이 부재한 직원이 근무 중임



- 그로 인해 주제 발굴, 분석 내용(사업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 등 여러 측면에서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³⁾
 -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이 부족함
 -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작성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는 충청남도만의 사정이 아니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이로 인해 분석보고서가 단편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분석업무 경험이 누적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분석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문제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신규 전입하는 팀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요구권 부재로 인한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려움
 - 자료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어려움
-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면 좋을 것임

■ 현재의 인력 대비 높은 분석 수요

- 현재의 분석업무는 초기 정착과정에 있고 인력 또한 한정되어 있으나 의원의 분석 수요가 높음
 - 현재 위원회당 3~5개 세부사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세부사업 분석 개수를 10개 내외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음
 - 소규모 사업, 의원 관심사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1인이 1개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고, 1개 상임위원회에는 3~4개의 실국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함

3)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과정에서의 애로점으로 서술함

(3) 업무분장의 적절성

■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간 업무구분 불명확

-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간 업무영역 구분이 불명확하여 타 팀의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예산분석팀은 도청 총괄 및 행자위, 문복위, 농경환위 분석을 수행 중이고, 예산조사팀이 교육청 총괄 및 운영위, 안전해소를 담당하고 있음
 - 2019년 1월 예산분석·조사팀을 설치할 당시 서울시의회 모델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세 개씩 나누어 분석하도록 함
-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산분석팀 팀장이 예산조사팀 팀원의 업무영역(도청 운영위원회, 안전해소위)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단점이 노출됨
- 예산조사팀장 또한 예산분석팀의 일을 종속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자원을 낭비하는 업무분장이라는 경험을 하였고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음
- 경기도의회처럼 한 팀에서 도청 5개 위원회를 담당하고 한 팀에서 교육위원회와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인원은 예산분석팀 5인(팀장 1(운영위), 행자위, 문복위, 농경환위, 안전해소위), 예산조사팀 3인(팀장1, 교육위원회,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으로 구성
- 산업예산, 행정예산, 사회예산팀 등의 성격별로 팀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전문위원실과 업무 중복 가능성

-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또한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됨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예·결산분석조직을 갖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4) 향후 조직운영 방향

■ 분석업무의 체계화

- 중장기적으로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를 체계화하여 의정활동지원을 보다 체계화시켜야 함
- 예·결산분석조직은 예·결산분석업무와 함께 조례비용추계, 특정주제분석, 기타 등의 업무로 구성될 수 있음
 - 각각 업무의 비율은 예·결산분석 30%, 조례비용추계 30%, 기획현안분석 30%, 기타 10%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 분석보고서는 수요에 맞춰 유형화한 후, 개인당 할당량을 정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는 중규모의 현안기획분석을 연간 개인당 2건, 소규모의 조사분석보고서를 연간 개인당 2건을 수행하고 있음
- 충남도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체계화하여야 함

■ 임기제 공무원 확충

- 예·결산분석 조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어야 함
 -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인력을 구성하면 집행부와 연계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팀당 1명 정도만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직 공무원이 필요함
- 임기제(6호)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계통 석사학위자 또는 학부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 이상인 자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단계적 인력 확충

- 현재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에 각 1명의 공석은 충원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원의 5분 발언 등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의 정책연구원 제도가 마련됨
 - 정책연구원이 2~3년 정도 경력이 쌓이고 역량이 검증된 인력 중 예산분석조

직의 팀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지방의 미약한 인력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공석 이상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단기~중기적 관점에서 임기제와 행정직의 비율을 70:30 정도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직렬이 생겨⁴⁾ 역량이 쌓이게 되면 일반직의 비율을 점차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결산 분석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한 편람을 작성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 제도화

- 예·결산분석보고서 작성시 집행부의 자료요구 비협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보고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2016년에 예·결산분석조직의 자료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함

■ 비용추계업무 추가 필요

- 예·결산분석조직의 업무 중 비용추계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전남 이외 지역에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의회전문직렬 추가 필요

- 의회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의회전문직렬이 생겨야 함

4)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2019. 6. 18)으로 의회직렬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임

5) 시사점

■ 단계적 업무 확충

- 예·결산분석조직은 설치된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임
- 1~2년간의 운영을 통해 개선과제를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기제 공무원 확충

- 분석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직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함
- 현재와 같은 일반직 공무원을 통한 보고서 작성은 중장기적으로 예·결산분석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원대상 의견조사 결과,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심도있고 다양하고 객관적인 예산분석을 요청함. 이는 현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자료요구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이 필요하지만, 이는 실국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방식은 의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용이함
 -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에 대해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은 데 반해, 의원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사례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제1절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타 광역자치단체와 미국의 주(州)정부의회의 예산분석·조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채택하고 있는 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조사기능 담당 기구의 적절한 운영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예산분석·조사기능 담당 기구의 기능 및 조직구조 등을 비교 분석
- 타 기관의 예산분석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과 비용추계 기능 수행에 대한 방향 제시

■ 조사대상

- 국내사례의 경우, 시·도의회 예산분석·조사기능 담당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외국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수준에 맞는 미국의 주(州)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선택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위스콘신 주 : 미국의 주 중에서도 예·결산 분석·조사와 관련하여 주의회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캔자스 주 : 인구가 약 291만 명으로 충청남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함. 인구의 규모가 충청남도와 비슷한 타 주에 비하여 예·결산 분석 및 조사와 관련하여 주의회에 대한 지원이 우수함

■ 조사내용

- 조직 개요
 - 소속 및 부서의 하부 구성
- 조직 기능
 - 부서의 주요 업무 및 하부 조직의 주요 담당 업무



- 조직 구성
 - 부서의 인원, 일반직/임기제 여부 등 인력현황
- 예산분석 및 비용추계 사례
 - 예산분석 및 비용추계 사례는 타 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등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방법

- 조사 대상에 대한 문헌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조사 실시
 - 외국사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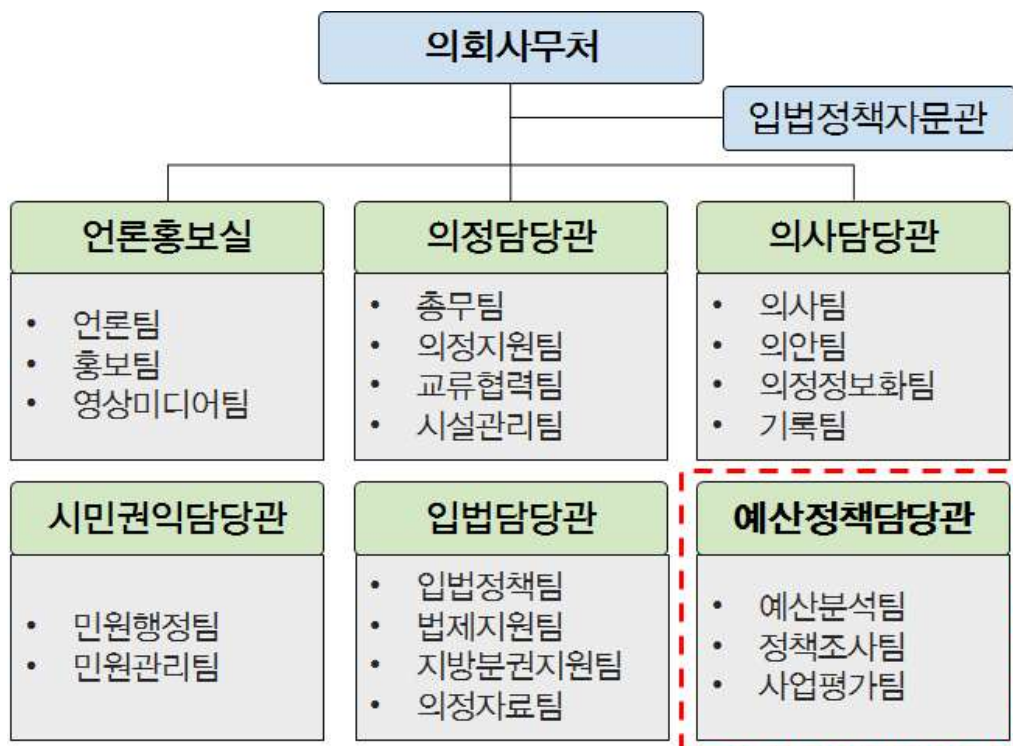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1.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조직 개요

- 서울시의회의 의원정수는 110명이고, 10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는 1실 5담당관, 20팀, 11전문위원으로 구성됨
-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분석 업무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함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다루는 서울특별시 예산은 약 48조원임. 서울특별시 본청의 약 38.8조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약 9.4조원임
-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분석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으로 구성됨
 - 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이 설치된 2011년 당시에는 1담당관, 2팀, 8명으로 시작하였음



[그림 3]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주) 2019년 8월 기준

■ 주요 기능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예산안, 결산 총괄분석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시청 및 교육청의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 총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 팀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예·결산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예산분석팀은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담당함
 - 정책조사팀은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통위원회를 담당함
 - 사업평가팀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함

■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팀별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인력현황
예산분석팀	• 소관 상임위원회(운영,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조사분석)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결산 분석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총괄 • 예산·결산토론회 개최 총괄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 지원 • 예산과 정책, 예산·지방재정연구동향 작성 총괄 • 주요업무계획, 조직, 인사 등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총괄	일반직: 5명 (팀장포함)

정책조사팀	•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 보건복지, 교통) -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조사분석) • 서울시예산안·결산 총괄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분석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조사분석) 총괄 •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성인지 예산안·결산분석	팀장: 임기제 (1명) 일반직: 1명 임기제: 3명
사업평가팀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육) -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조사분석) • 교육청 예산안·결산 총괄분석 • 서울시 주요역점사업 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 총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서울시 기금운용계획, 주민참여예산 분석	팀장: 임기제 (1명) 일반직: 1명 임기제: 2명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2019년 8월 기준)

- 예산분석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일반직공무원임
 - 예산분석 업무보다는 예산·결산토론회 개최 등 행정지원 업무 비중이 높음
- 정책조사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획분석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팀장은 임기제이고 4명의 팀원 중 1명은 일반직, 3명은 임기제임
 - 기획분석의 주제선정, 의원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함
- 사업평가팀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용추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팀장은 임기제이고 3명의 팀원 중 1명은 일반직이고, 2명은 임기제임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관련자 교육 및 담당자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팀별 수행사무에 비취 팀명칭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3개 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분석의 공통사무와 개별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개별사무의 특성에 비취보았을 경우에도 팀명칭과 수행사무 간 적합성이 낮음



■ 주요업무 활동내용

-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수행
 - 총괄분석 및 위원회별 분석
 - 위원회별 성과보고서 분석(1건)
 - 위원회별 주요 개별사업 분석(2건)
- 2019년 예산안 분석
 - 총괄 및 상임위원회별 분석
 - 주요 예산사업 분석(35건)
- 예산 재정·기획분석
 - 예산 재정 관련 제도와 서울시 정책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정 현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분석 보고서를 제공함
 - 2018년에 공동분석 2건 수행 : 서울시 자치구 재정분석,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 개별분석 8건('18년) 수행 : 공공구매제도 운영현황, 부담금 실태,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 등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선정 개별분석 수행함
- 2018년 78개의 주요시책 사업분석 실시
- 2018년에 5억원 이상 사업 108건에 대한 비용추계 실시함
 - '15년 95건, '16년 111건, '17년 123건이 비용추계 실시

■ 예산분석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분석은 크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구분되어 실시됨
- 서울시에 대해서는 총괄분석과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이 이루어짐
 - 총괄분석은 다시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됨
 - 서울시 예산안 분석은 서울시 전체 예산안 개요, 예산안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성인지 예산 분석, 시민참여예산분석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5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울시 예산 전반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실시함

-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은 실국별 예산 추이, 세입·세출 분석, 주요사업 현황,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으로 구성됨

제1장 서울시

I. 총괄분석

- ① 2019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1. 서울시 예산안 개요
 2. 서울시 예산안 분석
 3. 2019~2023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4. 성인지 예산 분석
 5. 시민참여예산 분석
- ② 2019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II.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 ① 행정자치위원회
- ② 기획경제위원회
- ③ 환경수자원위원회
- ④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⑤ 보건복지위원회
- 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⑦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⑧ 교통위원회

제2장 서울시교육청

1. 총괄 분석
2. 세입·세출 분석
3. 주요사업 현황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 주요사업 현황에서는 신규사업 현황, 30%이상 증액사업 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제시함. 현황에 제시되는 사업의 수준은 세부사업임
-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분석을 실시할 사업을 선정함
- 즉, 개별사업은 신규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통 각 1건씩 실시됨



- 이외 추가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지방세입·채무관리계획 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됨
-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은 체계적인 구조 하에서 실시되어 위원회 전반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다만, 세부사업 단위로 분석됨에 따라 분석대상 사업 수가 소수에 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제한적임
- 그러나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분석보고서 외에 ‘결산분석보고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 ‘기획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의원에게 상당한 분석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예산분석보고서에서의 분석사업 수가 적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분석은 사업개요, 예산(안) 요구내역, 문제점 및 현황분석, 검토의견으로 구성됨

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실국 과	
----	------------	--	--	--	--	---------	--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 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근거
- ☐ 추진경위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 추진일정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합계	기투자	2018	2019	2020 이후	비고

☐ 최근4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이월(F)		집행잔액 (D-E-F)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									
2016									
2017									
2018									

☐ 예산(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B-A)	산출내역
계					
시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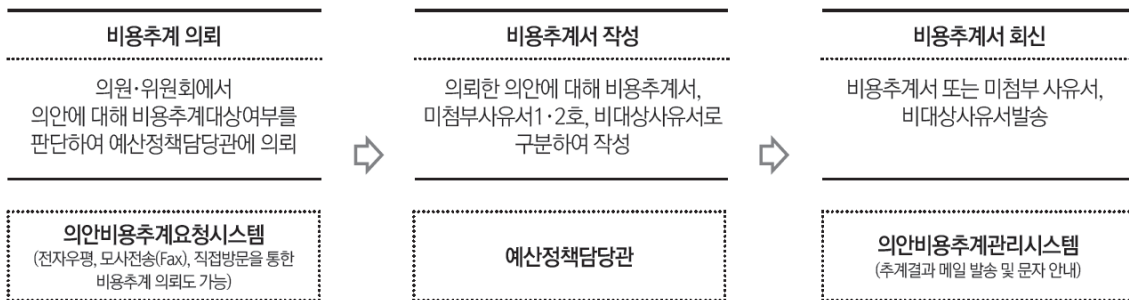
☐ 현황분석 및 문제점

☐ 검토의견

[그림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 비용추계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5년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5.1.2.)됨에 따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 추계하여 작성함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예 관한 규정」(2018.4)을 제정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전체 과정이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의원·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 예산정책담당관의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용추계를 의뢰함
 - 비용추계서를 회신할 경우, 비용추계 결과를 ‘의안비용추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메일발송 및 문자안내로 의원·위원회에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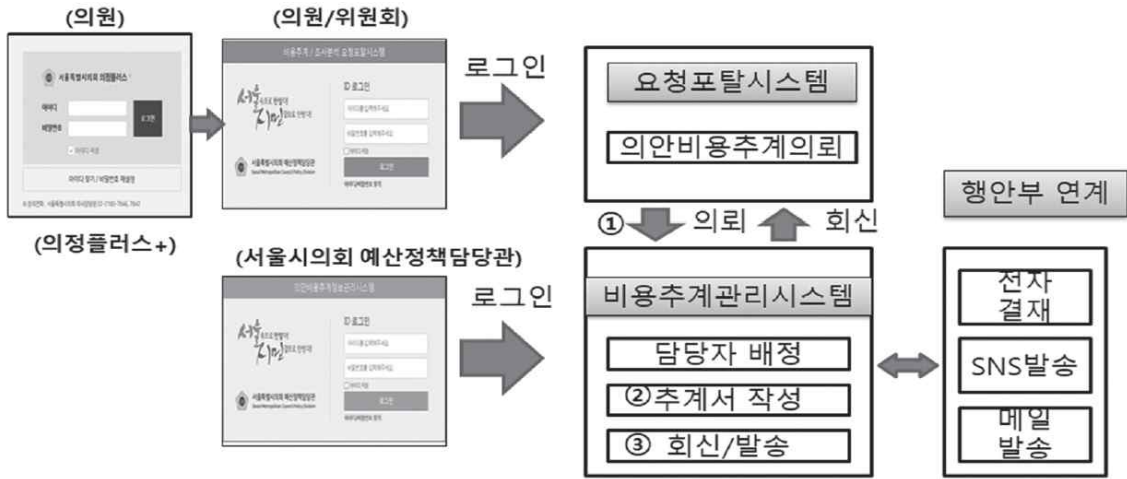


[그림 5] 서울특별시의회 비용추계 절차도

자료: 서울특별시의회(2018). 「2018년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p.11.

- 또한 의안 비용추계 요구사항과 회신에 관한 사항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의견, 작성자, 상세내역 등이 포함됨

- 비용추계의 전제의 세부내용은 대상, 전제, 방법 등으로 구성됨



[그림 6]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도

자료: 서울특별시의회(2018), 「2018년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p.11.

○○○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그림 7] 서울특별시의회 비용추계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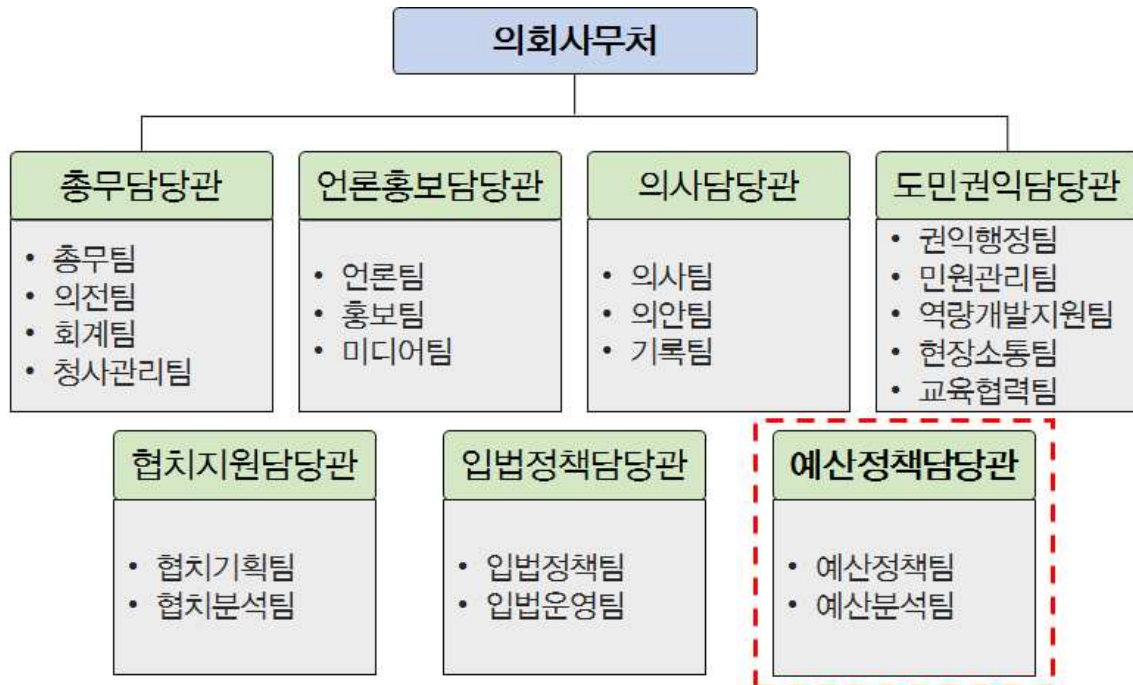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설치목적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는 것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 한 사항 등임

2)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조직 개요

-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는 142명이고, 11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는 7담당관, 21팀, 12전문위원으로 구성됨
- 경기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업무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함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다루는 예산은 약 45조원임. 경기도 본청의 약 29.5조원과 경기도 교육청의 약 9.4조원임
 -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정책팀과 예산분석팀으로 구성됨
 - 경기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은 2012년 1월에 신설되었고, 당시에는 입법 정책담당관 소속으로서 예산정책과로 시작함
 - 설립당시 정원은 8명이었고, 과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3명(세무직 1명 포함)으로 시작함
 - 2013년 ~ 2014년 사이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2개팀 조직체계를 갖추 고 20명의 정원을 확보함



[그림 8]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주) 2019년 8월 기준

■ 주요 기능 및 인력 현황

- 예산정책담당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정책의 수립과 조사·분석
 -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 분석
 - 조례안 등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등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팀과 예산분석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정책팀은 예산정책 일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예산분석팀은 예산안분석, 결산분석, 의원안 발의 시 비용추계분석 등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3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인력현황
예산정책팀	- 예산정책위원회, 인사, 조례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일반직: 4명 (팀장포함)
예산분석팀	-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지원	임기제: 16명 (팀장포함) (12명)

주) 예산분석팀 16명 중 4명은 타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예산분석업무 수행 인력은 12명임
자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6명임
 - 예산정책팀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일반직공무원임
 - 예산분석팀은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임기제 공무원임
 - 예산분석팀에 16명의 인력이 배정되어 있지만, 2019년 7월 현재 4인은 타 부서로 배정되어 있어 실제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12인임
- 업무성격에 맞춰 조직구조를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예산정책팀은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인사, 조례, 예산정책 수립 등 예산분석 업무와 관련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에 맞춰,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본청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예산분석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

■ 주요업무 활동내용

-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수행
 - 총괄 및 위원회별 분석 실시
 -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위원회별 10~20건)

- 2019년 예산안 분석
 - 총괄 및 상임위원회별 분석
 - 주요 예산사업 분석(위원회별 20~30건)
- ※건당 2~3쪽 정도 작성
- 예산 재정·기획분석
 - 예산안 및 결산분석 시 기획분석 보고서 별도 배부
 - '18회계연도 결산분석 시 : 출자출연기관 결산분석, 국고보조금 결산, 지방보조금 결산
 - '19연도 예산안분석 시 : 출자출연기관 예산분석(26개 기관)
- 2018년 222건에 대한 비용추계 실시
- 2016년에 자료요구권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업무의 수행력을 높이고 있음

■ 예산분석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분석은 크게 총괄분석과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이 이루어짐
 - 총괄분석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분석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별 예산분석에서는 세부 사업별 분석이 실시됨
-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은 실국별 예산사업 중 분석대상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짐
- 대상사업은 대상 실국의 주요 자체재원사업과 핵심사업이 됨. 자체재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와 간략한 분석의견만 제시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분석이 실시됨
 - 핵심사업은 주로 예산규모가 크거나 새롭게 수립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에 대한 분석은 예산규모, 사업내용, 분석의견으로 구성됨
 -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설명서가 제공되어, 분석의견을 초점을 두고 보고서가 작성됨
 - 4~5페이지 분량의 예산사업별 분석에서 분석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함



번호	사업명	예산안 ○○○페이지 과			
----	-----	-----------------	--	--	--

☐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본예산 (A)	2018년			2018년 대비 증감 (A-B)
		계 (B+C)	본예산 (B)	1회추경 (C)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 사업개요

○

☐ 분석의견

○

[그림 9]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 비용추계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에 대한 ‘2013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백서’ (사례집)를 발간하였고, 재정건전성 도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년 경기도 의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함
- 작성대상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됨
 - 비용추계의 전제에는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이 작성됨

○○○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세출	○						
	○						
	소계						
세입	○						
	○						
	소계						
총 비용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군비							
민간							
기타							
합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3) 협의사항

6. 작성자

[그림 10] 경기도의회 비용추계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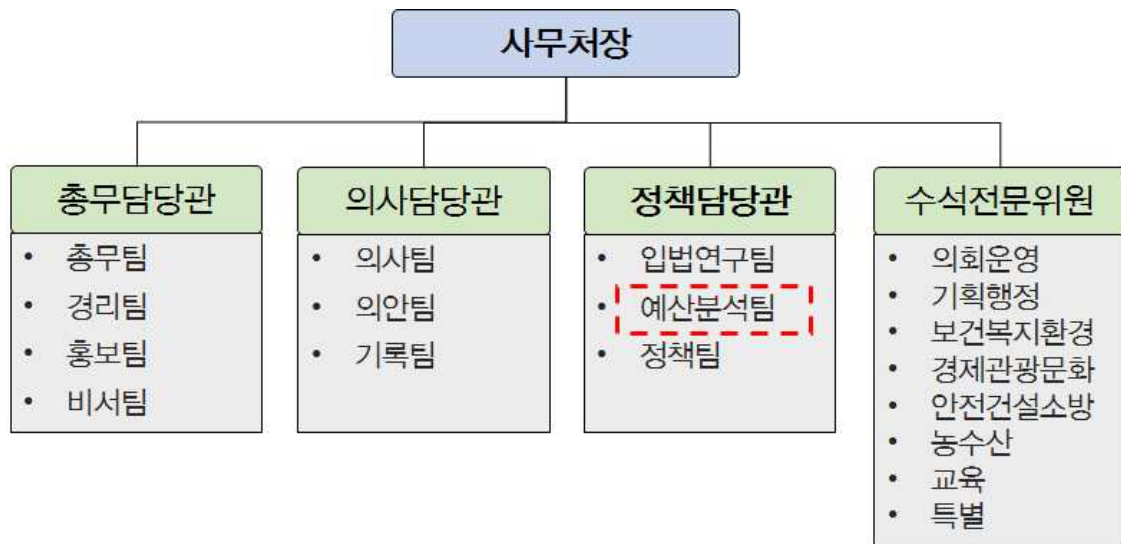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 경기도의회는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설치목적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기능은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등에 대한 심의 등임

3)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

■ 조직 개요

-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수는 58명이고, 7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전라남도 의회사무처는 3담당관, 10팀, 7전문위원으로 구성됨
- 전라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업무는 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함
 - 전라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에서 다루는 전라남도 예산은 약 12조원임. 전라남도 본청의 약 8.4조원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약 3.8조원임
- 정책담당관은 정책팀, 예산분석팀, 입법연구팀으로 구성됨
 - 예산분석팀이 설치된 2015년 당시에는 1팀 2명으로 시작하였음



[그림 11]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자료: 2019년 8월 기준

■ 조직 기능 및 인력 현황

- 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정책팀은 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의회소관 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 반영, 전국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의회자료실 운영 및 관리,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예산분석팀은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도청 및 교육청 예산분석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입법연구팀은 입법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36]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인력현황
정책팀	- 정책총괄업무 전반 - 입법정보 발간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 - 의원연구단체 지원운영 - 의회자료실 운영	일반직: 4명 (팀장포함) 공무직: 2명
예산분석팀	- 예산분석업무 전반 - 교육청 예산분석업무 - 도청 예산분석 업무	일반직: 4명 (팀장포함, 교육청 파견 1명 포함)
입법연구팀	- 입법연구업무 전반 - 입법정책연구(안전건설소방·농림해양수산) - 입법정책연구(보건복지환경) - 입법정책연구(기획행정) - 입법정책연구(경제관광문화)	팀장: 임기제 (1명) 일반직: 1명 임기제: 4명

자료: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

-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의 전체 인원은 담당관 포함하여 17명이고, 예산 분석팀은 4명임
 - 정책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일반직이 4명이고, 공무직이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됨
 - 예산분석팀은 교육청 파견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팀장을 포함하여 4명 모두 일반직이고 2인당 2~3개의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음
 - 입법연구팀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팀장을 포함하여 5명이 임기제이며, 1명은 일반직임
- 최근 예산분석팀은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주요업무 활동내용

-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수행함
 - 총괄 및 위원회별 분석 실시
 -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38건)

- 2019년 예산안 분석을 수행함
 - 총괄 및 상임위원회별 분석
 - 주요 예산사업 분석(33건)
- ※건당 4~5쪽 정도 작성
- 2018년 47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함
 - 2019년 현재 53건에 대한 비용추계 추진 중에 있음

4)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

■ 조직 개요

- 경상남도의회의 의원정수는 58명이고, 7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경상남도의회 의회사무처는 3담당관, 10팀, 8전문위원으로 구성됨
- 경상남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업무는 입법담당관에서 담당함
 - 경상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에서 다루는 예산은 약 14조원임. 경상남도 본청의 약 8.7조원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약 5.4조원임
 - 입법담당관은 입법팀, 예산분석팀, 연구팀, 정책팀으로 구성됨
 - 예·결산분석 조직은 2018년에 신설되었고 당시에는 1팀 5명으로 구성됨



[그림 12]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의 조직도

주) 2019년 8월 기준



■ 조직 기능 및 인력 현황

-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입법팀, 예산분석팀, 연구팀, 정책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입법팀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 자치법규관련 제·개정안 연구 검토, 자치법규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법령 개선안 검토,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의 조사·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예산분석팀은 예산분석업무계획 수립, 예·결산 분석 및 핵심사업 분석, 국회 및 타 시·도 예산 정책 관련 자료 수집,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연구팀은 의원 연구단체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의회 학술연구 용역 수행과제 발굴, 경상남도 의회소식, 입법정책 동향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정책팀은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됨
 - 입법팀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은 일반직이고, 1명은 임기제임
 - 예산분석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팀장을 포함하여 2명은 일반직이고, 3명은 임기제임
 - 연구팀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팀장은 임기제이고, 2명은 일반직이며, 1명은 공무직임
 - 정책팀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일반직은 8명이고, 임기제는 5명임
-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7]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의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

구분	담당업무	인력현황
입법팀	-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 - 자치법규관련 제·개정안 연구 검토 - 자치법규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법령 개선안 검토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의 조사·검토 지원	일반직: 3명 (팀장포함) 임기제: 1명
예산분석팀	- 예산분석업무계획 수립 - 예·결산 분석 및 핵심사업 분석 - 국회 및 타 시·도 예산 정책 관련 자료 수집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관리	일반직: 2명(팀장포함) 임기제: 3명
연구팀	- 의원 연구단체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 의회 학술연구 용역 수행과제 발굴 - 경상남도 의회소식, 입법정책 동향 자료 수집	팀장: 임기제(1명) 일반직: 2명 공무원: 1명
정책팀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일반직: 8명 임기제: 5명

자료: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 주요업무 활동내용 및 활동계획

- 2019년도 확정예산을 분석함
 - 주요 예산사업 분석(44건)
 - ※ 건당 평균 9쪽 정도 작성
- 2019 하반기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실시 예정임
- 결산분석과 비용추계는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 예산분석

-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 및 경남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예산분석으로 예산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산심의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분석을 실시함
- 예산분석은 크게 예산분석 총괄과 사업별 예산분석으로 구성됨



- 예산분석 총괄에서는 분석대상사업, 분석내용 등 분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사업별 분석의견을 종합·정리함
- 사업별 예산분석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별 예산분석을 실시함
- 분석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의원 관심사업(당초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
 -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성과 저조사업
 - 상임위별 연계사업 및 단체장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등
- 사업에 대한 분석내용은 예산현황, 주요사업내용, 분석의견으로 구성됨
 - 예산서, 결산서, 주요사업조서, 업무보고, 감사원감사자료, 언론보도 등 근거를 제시함
 - 예산의 변동추이, 타 시도 비교 등을 통한 사업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함
-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의 대상사업에는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 섞여 사업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사업명	당초예산서 페이지 과					
☐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A)	2017	2018(B)	평균	증감 (B-A)	증감률 (B-A)/A
☐ 현황 또는 사업내용 ☐						
☐ 분석의견 ☐						

[그림 13]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

■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 등에 대한 자문 등으로 구성됨
- 2019년 현재 도의원 3명과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활용됨

2. 국회의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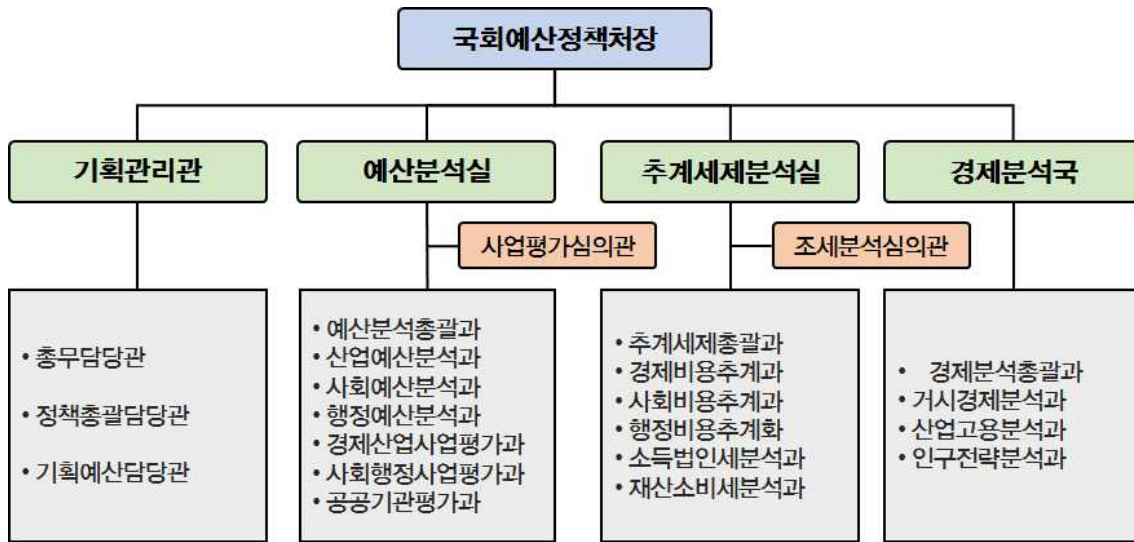
■ 조직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임
 -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됨
 - 설립당시에는 2실 1국 1관 1심의관 15팀, 정원 92명의 구성이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조직의 기능 및 구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처장, 2실 1국 1관, 3담당관 17과로 구성되어 있음

5)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s://www.nabo.go.kr/index.jsp>) 참조



[그림 14]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자료: 2019년 8월 기준

- 기획관리관은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기획·총괄·조정, 조직 및 인력 관리,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함
- 예산분석실은 예·결산 분석 업무, 국가사업 평가 업무,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분석 업무, 주요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및 정부 성과 관리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함
- 예산분석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 위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 추계세제분석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세입부문 예·결산 및 조세제도에 대한 분석,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담당함

- 추계세제분석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 위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 경제분석국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국가적 현안과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산업구조와 인구동향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경제분석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 위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 인력구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수행업무가 인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의 인력은 대부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됨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국가의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됨

■ 예산분석

-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함.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됨
 -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 이를 통해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함
 -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예산안 분석 외에 결산 분석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 의안의 비용추계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실시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 의원과 위원회는 의안의 비용추계를 팩스 등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종합입법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회답하도록 되어 있음

〇〇〇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구 분	연 도						
	연 도						
	연 도						
지출	○						
	○						
	소 계(a)						
수입	○						
	○						
	소 계(b)						
총 비용(a-b)							

II. 재정수반요인

III. 비용추계의 전제

IV.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V. 부대의견

VI. 작성자

[그림 15] 국회 비용추계서 서식

3. 해외 사례

1) 미국 위스콘신 주 입법재정국(Legislative Fiscal Bureau)

■ 조직 개요

- 위스콘신 주 입법재정국은 위스콘신 의회에 소속된 비정파적(초당적) 기관(nonpartisan service agency)임
- 입법재정국은 위스콘신주의회, 의회의 각종 위원회 및 의원 개개인에게 재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
- 16인으로 구성된 합동재정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Finance)의 스텝으로도 활동
 - 합동재정위원회는 주의 세입과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
 - 합동재정위원회는 상원위원 8인, 하원위원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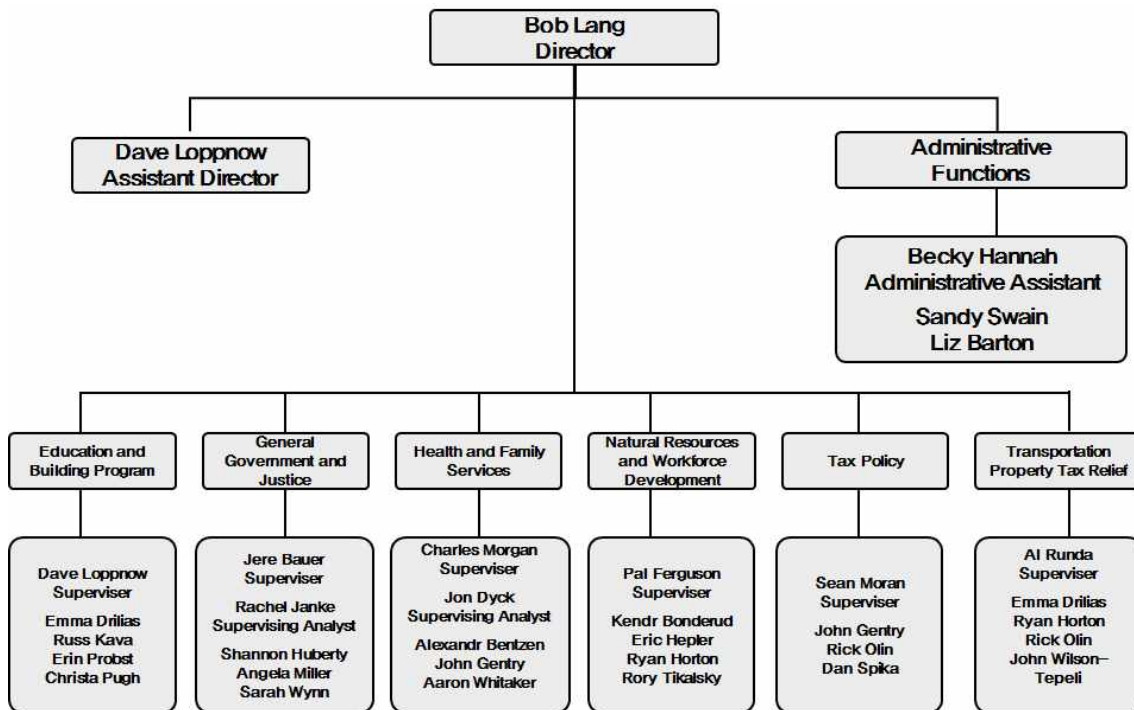
■ 주요 기능

- 입법재정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주의회 또는 입법위원회의 심의에 도움이 되는 재정정보의 제공
 - 입법을 함에 있어서 주정부 예산, 주정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고려사항 제공
 - 재정 및 사업 분석
 - 기존 및 제안 된(신규) 사업 및 예산 검토
 - 세출 예산 평가 및 합동재정위원회와 의회에 권고
 - 주의 재정과 관련된 의회의 지시 또는 국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업무
- 세부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1) 기관 운영 예산 분석
 - (2) 합동재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 (3) 개별 주의회 의원의 재정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
 - (4) 입법안에 대한 재정 효과 평가·분석
 - (5) 주정부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6) 주정부 기관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감시

- (7) 주정부 기관의 자본 예산 요청에 대한 분석
- (8) 주정부 수입 추정
- (9) 다른 입법위원회의 재정부분에 대한 협조
- (10) 다른 입법기관 직원들에게 재정 정보 서비스 제공

■ 조직의 구성

- 입법재정국은 기능적 영역을 중심으로 팀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음
 - 6개의 팀 : 교육·건축팀, 행정·사법팀, 복지·가족팀, 자원·노동개발팀, 세금정책팀, 교통·재산세팀
- 2019년 1월 현재 국장(Director) 아래에 6개의 팀과 행정지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림 16] 위스콘신주 입법재정국의 조직도

자료: 2019년 8월 기준

- 행정지원팀에는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6개의 팀에는 총 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각각의 팀은 해당 기능·영역의 전문가인 재정분석가(fiscal analyst)들로 구



성이 되어있음

- 보통 1명의 팀장(program supervisor)과 3명의 팀원으로 구성
- cf) 현재의 조직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음. 예를 들어 행정법무팀(General Government and Justice)의 경우, 팀장(1), 감독분석가(1), 팀원(3)으로 구성되어 있음
- cf) 일부 재정분석가(팀원)의 경우, 복수의 조직(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2) 미국 캔자스 주 입법연구부(Kansas Legislative Research Department, KLRD)

■ 조직 개요

- 캔자스 입법연구부(KLRD)는 캔자스 주 의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파적(초당적) 기관(nonpartisan agency)임
 - 1934년부터 주 의회에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와 재정분석을 제공해왔음
- KLRD의 장은 입법조정위원회(The Legislative Coordinating Council)가 임명
 - KLRD는 정책분석가, 재정분석가, 입법연구원 및 입법연구인턴,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2019년 회기 기준으로 정책분석가 17명, 재정분석가 13명, 입법연구원(인턴 포함) 3명, 행정직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주의회 의원들에게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와 재정분석을 제공
 - 입법자(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답변을 준비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연방·주·지방정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요청
 - *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 이슈에 관한 기존 자료에 대한 의뢰
 - * 캔자스 및 다른 주의 현재 법령에 대한 요약
 - * 법령 또는 정책에 대한 연구

* 기타 KLRD부장이 승인한 업무

■ 분석가들의 영역 및 책무

- KLRD는 정책분석기능과 재정분석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조직적인 관점에서 정책분석기능과 재정분석의 기능이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않고, 개인별 임무로 구분이 되고 있음
- KLRD는 일반적으로 두 명의 정책분석가를 각각의 상설위원회에, 두 명 이상의 재정분석가를 각 하원 예산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 상원 세입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배정
- 분석가들은 영역·사업별로 정책분석 및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각각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정부의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분석 주제 분야 : 농업 및 천연 자원, 사법, 에너지 및 전기, 교육, 윤리 및 선거, 연방 및 주정부 사무,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보훈, 선거구 재조정, 과세, 교통 등
- 분석가들의 일반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음
 - 임시위원회 지원
 - 위원회 및 개별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충자료, 소위원회 보고서, 위원회 요약보고서 작성
 - 주정부 예산, 기관의 예산 신청, 주지사의 예산 요구에 대한 분석
 - 세출예산안 작성 지원
- 분석가들은 또한 매회기마다 입법과정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각종 보고서 작성
 -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재정 및 정책 관련 문서가 모두 포함됨
- 회기 중 정책분석가 및 재정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각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발표
 - 의안에 대한 설명
 - 개별 주 기관에 대한 예산 분석(주로 재정분석가가 담당함)



-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는 개별 법안에 대한 보충 자료 준비(주로 정책분석가가 담당)
- 최종 예산안을 포함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예산 조정을 통합하는 소위원회 보고서 준비(재정분석가)
- 컨퍼런스위원회 요약 보고서(CCRB' s, Conference Committee Report Briefs) 준비(정책분석가)
- 각각의 원(院)의 입장을 강조하는 세출 법안에 대한 3단 보고서 준비(재정분석가)
- 의원회 회의의 초안 검토

■ 조직의 구성⁶⁾

- KLRD는 2019년 1월 현재 부장(Director)아래 재정분석기능, 정책분석기능, 입법연구기능, 행정지원기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음
 - 정책분석기능 : 차장(Assistant Director)이 임명되어 있으며, 16명의 분석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재정분석기능 : 차장(Assistant Director)이 임명되어 있으며, 13명의 분석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법연구기능 : 3명의 연구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입법연구인턴 1명 포함)
 - 행정지원기능 : 8명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3)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조직 개요

-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1974년 의회예산법(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의 제정에 따라 의회에 경제 및 예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 예산분석국 등 8개 분석부서와 그 밖의 부속기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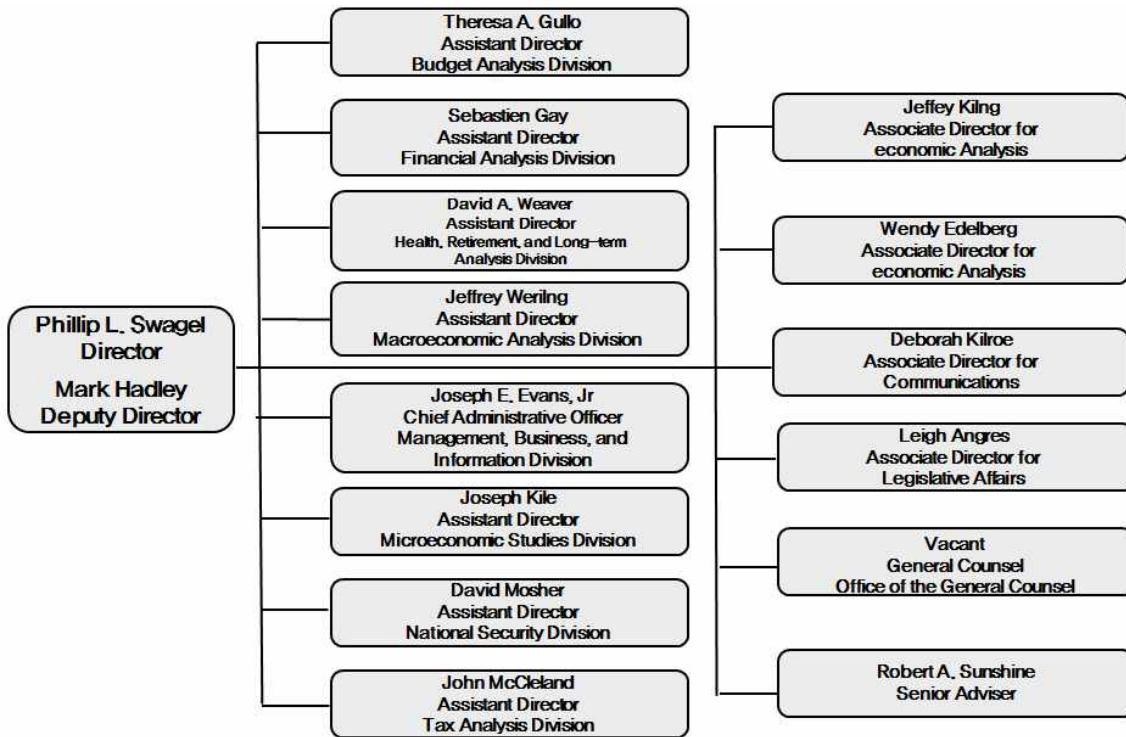
6) KLRD는 명확하게 각 기능별로 하부조직(팀 또는 부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의회예산처의 직원은 하원의 공무원 신분으로 이해관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윤리규정을 적용받음
- 의회예산처는 법률에 따라 경제 및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의회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추계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업무지원의 우선순위는 ① 예산위원회의 요구사항 ②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및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요구사항 ③ 기타 위원회의 요구사항 ④ 개별 의원의 요구사항
- 상·하원 위원회 및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경제 및 예산 관련 정보를 제공
 - 재정 및 경제전망, 대통령 예산안 분석, 비용추계, 예산대안분석, 장기 재정 전망
 - 그 밖에도, 미수권 세출 및 만료된 수권 분석(Unauthorized Appropriations and Expiring Authorizations) 등 다양한 업무 수행
- CBO에는 현재 약 2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로 경제학자 또는 정책 전문가로 구성
 - 또한 CBO는 변호사, 정보 기술 전문가 등 CBO의 조직 임무(mission)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음

■ 조직의 기능 및 구성

- 미국 의회예산처는 처장, 부처장, 8실 5담당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8실은 예산분석실, 재정분석실, 보건·인적자원 및 장기분석실, 거시경제분석실, 기획관리실, 미시경제연구실, 국가안보실, 조세분석실임⁷⁾
- 의회예산처장
 - 의회예산처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이 임명
 - 의회예산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또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음
 - 예산법은 의회예산처장이 정치적 소속에 관계없이 선택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예산분석기능과 관련이 있는 예산분석실, 재정분석실, 보건·인적자원 및 장기분석실, 조세분석실에 대한 설명만 추가함



[그림 17] 미국 의회예산처의 조직도

자료: 2019년 8월 기준

- 부처장
 - 부처장은 의회예산처장이 임명
 - 조직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처장을 보좌함
 - 처장의 결위, 부재, 능력상실의 경우에 처장을 대리
- 담당관
 - 처장 직속으로 경제분석담당관 2인, 공보담당관 1인, 법무담당관 1인, 의회담당관 1인, 선임고문 1인을 두고 있음
 - * 경제분석담당관 : CBO의 모든 분석업무 보좌
 - * 공보담당관 :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 및 대국민 홍보
 - * 법무담당관 : 법률 관련 업무 고문
 - * 의회담당관 : 대의회 관계 업무 총괄
 - * 선임고문 : 총괄 자문
- 예산분석실(Budget Analysis Division)
 - 예산분석실은 연방 예산에 대한 기준선 예측, 의회 위원회에서 승인 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비용 추계, 위원회가 고려중인 수천 건의 제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용 추계 산출

- 공식적인 비용 추계에는 연방 예산에 대한 법안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 정부 및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됨
- 또한 예산분석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분석 보고서도 작성을 함
 - * 대통령 예산(President's Budget)에 대한 연간 분석
 - * 월간 예산 검토
 - * 예산 옵션
 - * 제정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 * 법규화 되지 못한 세출 및 승인 만료된 세출에 대한 연간 예산 분석
- 재정분석실(Financial Analysis Division)
 - 연방 신용 및 보험 프로그램, 정부보증 기업을 포함한 연방 정부의 재정채무와 관련된 분석에 초점을 둠
 - 또한 재정평가 및 모델링, 재정 변수 예측을 지원
- 보건·인적자원 및 장기분석실(Health, Retirement,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건강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 사회 보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분석
 - 일련의 정책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화에 대한 추정
 - 장기 예산 예측과 제안된 법률안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
- 조세분석실(Tax Analysis Division)
 - 경제 모델 및 미세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미래 연방 세수(개인 소득세, 지급 급여세, 법인 소득세 및 기타 세원)에 대한 추정
 - 연방 세금 및 지출의 분포를 분석하고, 납세자의 행태 및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세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1. 특징 정리

■ 타 시·도의회 사례 비교

- 이상에서 검토한 타 시·도의 사례를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 현황 비교·정리

구분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예산규모 (2019년)	48조원 (시 38.8, 교육청 9.4)	45조원 (도 29.5, 교육청 15.4)	12조원 (도 8.4, 교육청 3.8)	14조원 (도 8.7, 교육청 5.4)	11조원 (도 7.3, 교육청 3.4)
의회구성	10개 상임위 (의원 110명)	11개 상임위 (의원 142명)	7개 상임위 (의원 58명)	7개 상임위 (의원 58명)	6개 상임위 (의원 42명)
의회사무처 구성	1실 5담당관, 11전문위원 (정원 298명)	7담당관, 12전문위원 (정원 227명)	3담당관, 7전문위원 (정원 92명)	3담당관, 8전문위원 (정원 113명)	3담당관, 7전문위원 (정원 123명)
예·결산분석 조직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입법담당관)	입법예산정책 담당관
	15명 (1담당관, 3팀, 직원11)	21명 (1담당관, 2팀, 직원18)	4명 (1팀, 직원3)	5명 (1팀, 직원4)	6명 (2팀, 직원4)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 1인당 예산규모	3.20조원	2.14조원 (2.65조원) ^{주)}	3.00조원	2.80조원	1.83조원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 1인당 의원 정수	7.3명	6.8명 (8.4명) ^{주)}	14.5명	11.6명	7.0명

주) 경기도의 괄호()의 수는 실제 근무자 수(17명)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 예·결산분석 조직의 인력 1인당 예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충청남도는 비교대상 5개 시·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남

- 서울시의회가 3.2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남도의회가 3.0조원으로 많으며, 충청남도의회는 1.83조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예·결산분석조직 인력 1인당 의원 정수를 비교한 결과, 충청남도는 비교 대상 5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전라남도의회가 1인당 14.5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의회가 11.6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서울특별시의회는 7.3명, 경기도의회는 6.8명, 충청남도의회는 7.0명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회는 실제 근무인력으로 계산한 결과에서는 8.4명으로 나타나 충청남도의회가 실제로는 가장 적음

■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유형화

- 위의 사례를 ‘독립적인 예산정책담당관 유형’, ‘입법정책담당관 내 팀 배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는 서울특별시의회 및 경기도의회와 같이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는 경우임
- 시·도예산 규모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과 의원수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⁸⁾
- 후자는 경상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와 같이 입법담당관 또는 정책담당관 아래 팀(예산분석팀)으로 존재하는 경우임
- 시·도예산 규모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과 의원수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전문화된 예·결산분석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부서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와 같이 인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입법정책업무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정책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8) 서울특별시는 예산규모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 비율이 3.20조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의 재정구조가 광역도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이는 국회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원리와 동일함
 - 국회가 양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입법정책과 예산정책의 업무의 영역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
 - 입법정책은 입법에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합법성·타당성·실효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예산정책은 예산에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주로 효율성, 효과성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경기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예·결산분석 조직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결산분석 조직과 지원조직을 별도로 구성함
 - 이를 통해 조직내 업무의 일관성과 집중력을 높이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업무의 전문화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예·결산분석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결산분석, 예산안분석, 기획분석, 주요시책 사업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함
 - 예산안분석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결산분석과 예산안분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결산분석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그에 반해, 경상남도의회의 예산분석보고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 위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형식을 보임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비용추계 업무 수행

- 지방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인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전문인력을 확충한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되어 최근에 전라남도의회로 확산됨
- 지방의회의 비용추계는 대부분 국회 비용추계 형식을 따르고 있음
- 그에 따라,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의 비용추계양식은 매우 유사함
 - 의안의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비용추계 내용은 대동소이함

■ 별도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조직과 일반직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분석 조직의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되거나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을 통해 확보되거나 혼합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서울시의회는 예산분석팀장이 일반직공무원이고,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장, 사업평가팀장은 임기제공무원임
- 경기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팀 팀장, 전체 팀원이 일반직공무원이고, 예산분석팀장과 전체 팀원은 임기제공무원임
- 전라남도의회 예산분석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일반직공무원임
-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팀은 팀장 외 직원 1명은 일반직공무원이고, 직원 3명은 임기제공무원임
- 충청남도의회는 팀장 2명이 임기제공무원이고, 직원 4명은 모두 일반직공무원임

[표 39]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현황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계	15명 (담당관1, 팀장3,직원11)	21명 (담당관1, 팀장2,직원18)	4명 (팀장1,직원3)	5명 (팀장1,직원4)	6명 (팀장1,직원4)
일반직	팀장1, 직원6	담당관1, 팀장1, 직원3	팀장1, 직원3	팀장1, 직원1	직원4
임기제	담당관1, 팀장2, 직원5	팀장1, 직원15		직원3	팀장2

■ 조직명칭과 수행업무가 불일치하는 사례 발견

-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를 제외하고,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은 2개 이상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경우 팀의 명칭과 수행업무 간 적합성이 낮음
- 서울시의회는 경우, 예산정책담당관이 예산분석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팀간 수행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충청남도의 경우,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으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으나, 수행업무는 거의 동일함
- 그에 반해, 경기도의회는 수행사무에 근거하여 예산정책팀과 예산분석팀으로 구분함
 - 수행사무나 기능에 맞춰 조직을 구성할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시사점

■ 두 유형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충청남도 예·결산분석 조직

- 충청남도는 “독립적인 예산정책담당관 유형”과 “입법정책담당관 내 팀 배치 유형”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음
 - 시·도예산 규모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과 의원수 대비 예·결산분석 조직 인력의 비율에서는 “독립적인 예산정책담당관 유형”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조직의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예산정책담당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입법 예산정책담당관에 2개의 팀이 설치되어 있음
- 인력규모 또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음
-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이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보았을 때, 충청남도의회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예산담당관 유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 업무의 범위 확대

- 예·결산분석 조직이 예산에 관한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예산분석을 예산안 분석, 시책사업분석, 기획분석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대상의 성격에 맞춰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예산분석을 예산안분석,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범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예산안 및 결산 분석은 총괄분석, 분야별 분석, 사업별 분석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수행되어야 함

■ 비용추계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안비용추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전남 이외 지역에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지 않음
- 의안비용추계는 신규조례나 조례개정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재정소요를 예측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충청남도의회에 예·결산분석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 비용추계를 통해 의원발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안비용추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추계의 의뢰, 회신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고 비용추계의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결산분석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충청남도 예·결산분석 조직의 인원 수는 예산규모와 의원정수를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례와 비교하여 적지 않음
- 충청남도는 인력 수 증대보다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조직 설치의 목적달성에 집중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임기제공무원의 확충이 중요함



- 예·결산분석 업무의 고도화와 비용추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확충이 필요수적임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충청남도의회에 예산 및 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의원의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에 관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에 관한 자문활동을 실시하여 업무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 예·결산분석 업무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보완함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반영함
 - 위원회는 예산·기금, 재정·경제 및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와 의회의원으로 구성함
 - 조례에 의하여 구성 가능
- ※ 현재 서울시의회(예산정책연구위원회),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 경상남도의회(예산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설치가 되어 있음

제5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방향

제1절 기본방향

1. 충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조직의 필요성

■ 예산 편성·집행, 결산에서의 집행부 중심성

- 집행부가 예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반면, 도의회는 예산에 관한 정보를 집행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김종순, 1991)⁹⁾
 - 특히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통제기능이 미약함(박병식·이준호, 2005)¹⁰⁾
- 정보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집행부가 의회에 비하여 우위에 있음(임동욱·함성준, 2004)¹¹⁾
 - 도의회의 구성원은 4년마다 선거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업무의 연속성 및 경험이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한 집행부에 비하여 부족함
 -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이 선출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 측면에서 집행부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 도의원 개개인은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비하여 예산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 도의원은 도정활동과 더불어 지역구 활동 등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원에게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행정에서 이러한 집행부 우위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집행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임

■ 도의회 예·결산 심의·분석의 중요성

- 예산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9) 김종순(1991). 한국의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CB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1001~1007.

10) 박병식·이준호(2005).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 위임자-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203~225.

11) 임동욱·함성준(2004).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강화방안.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

-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통해 도민이 제공하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
- 행정환경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감시기능이 중요해짐
- 특히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증가하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의 도민 관점에서의 업무 수행

-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관점에서 집행부의 예산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예·결산분석 지원조직이 필요함
 - 의회가 효과적으로 예·결산 심의 활동을 수행하면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권한을 위탁한 도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은 의원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민의 관점으로 예·결산 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내·외부 여건 분석에 기반한 충남 모델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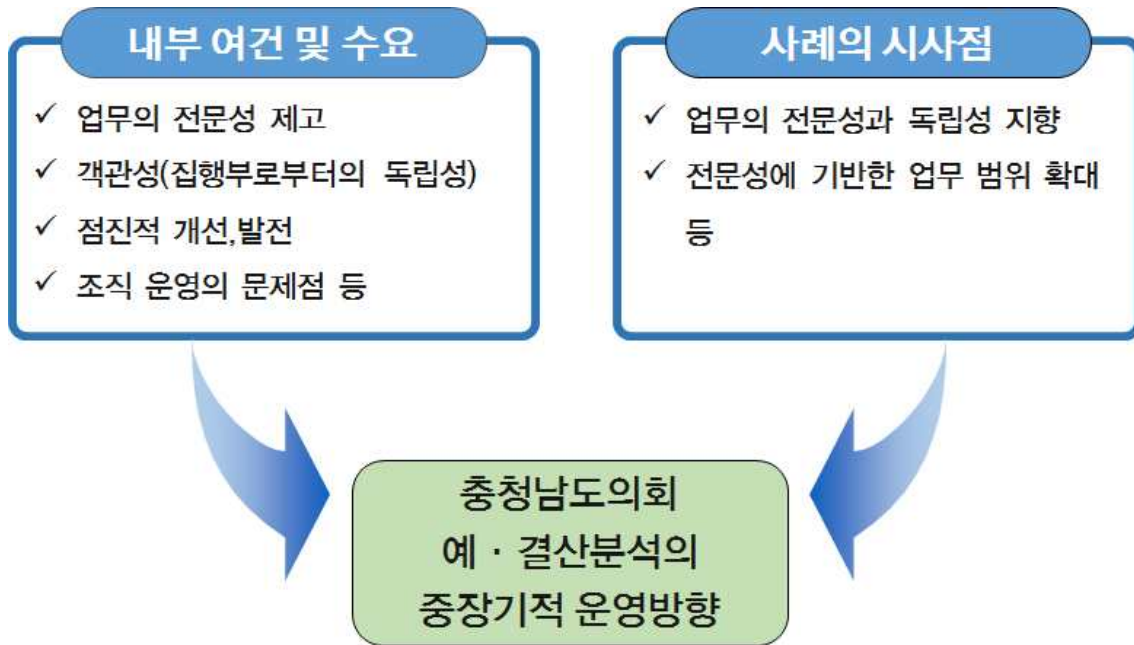
■ 내부 여건 및 수요 분석에 기반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발견됨
 - 불명확한 조직 구분, 인력과 업무의 부조화, 견제와 감시 관점의 불확실,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나타남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 조직, 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됨
 - 현재 조직을 몇 년간 운영한 이후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존의 방식이나 협조 방식이 적절함
 - 조직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예·결산분석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음
 - 예산분석에 다양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들은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심도있고 다양하며 객관적인 예산분석을 요청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사례조사의 시사점 적용

- 우리나라 지방의회, 국회, 해외의 예·결산분석 조직 사례를 조사하여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함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선진 사례에서는 예·결산분석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확보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기본적인 예산 및 결산 분석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여 재정 관련 의정활동에 전문적 지원기능을 수행함
 - 이와 함께, 예·결산분석 업무와 의원의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에 전문적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 사례조사 결과에서는 예·결산분석 조직이 전문성과 객관성(독립성)을 지향하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흐름을 충남에도 적용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함



[그림 18]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의 근거

■ 충남의 지역적 여건 반영

- 충청남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규모, 인구 등의 여건에 있음
- 의회사무처 또한 상대적으로 한정된 조직, 인력 여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적 모델 탐색

3. 충청남도의회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

■ 중기적, 장기적 관점 적용

- 본 연구는 1~2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운영방안 설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5년 정도 시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중기적 방안과 10년 정도 시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은 신설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상황임으로, 2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효율성,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안함
-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향을 제시함
-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력 구성을 통해 업무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업무범위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은 현재 예·결산분석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수행 정도는 서울, 경기와 비교하여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활동을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은 업무를 제시함

■ 예·결산분석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이상의 개선방향이 실행되기 위한 여건으로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제2절 예·결산분석 조직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

1. 조직 및 인력 개선 방향

1) 중기 1안

- 중기적 관점에서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예·결산분석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성이 높은 조직·인력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인력의 구성을 조정하여 수행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원 내에서 인력배치, 조직구조,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구성

- 예·결산분석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분야를 동질적으로 분류한 후, 수행업무에 맞춰 조직의 명칭을 행정예산분석팀(가칭)과 교육예산분석팀(가칭)으로 변경함
 - 현재의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은 단순히 인력을 동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구조에 지나지 않음
 - 현재 ‘예산조사팀’의 명칭은 수행업무에 비해 조직 명칭이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예산분석팀이 본청 소관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 예산조사팀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 문제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 업무분야를 본청 소관 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위원회로 구분하고, 수행업무에 맞춰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행정예산분석팀(가칭)은 본청 소관 위원회를 담당하고, 교육예산분석팀(가칭)은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담당함

■ 의안비용추계 및 현안분석 등 업무범위 확대

- 2019년 8월 현재 예·결산분석 조직은 예산분석 및 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음
- 충청남도 예·결산분석 조직은 예산분석 및 결산분석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현안분석, 시책분석, 기획분석 등으로 분석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충남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 의안비용 추계는 조례와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효율적인 재정부운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임
- 이와 함께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및 조례 담당, 예산업무 관련 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업무는 두 팀에 분배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
- 이상의 추가적인 업무 중 현안·시책·기획 분석은 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행정예산분석팀(가칭)과 교육예산분석팀(가칭)의 두 팀에서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업무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교육예산분석팀(가칭)에 배정되는 것이 적절함
- 이와 함께, 예·결산분석 조직과 관련된 제도나 인사 업무 또한 업무량 측면에서 교육예산분석팀(가칭)에 분장되는 것이 적절함

[표 40]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중기 1안의 업무분장

구분	인원	담당업무
행정예산 분석팀	5명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문화복지, 안전건설해양소방, 농업경제환경) 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기획 분석 및 조사 분석) 라. 출자출연기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분석 마.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충청남도청 예산안·결산 관련 총괄 바. 예산안·결산 분석 총괄 사.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총괄 아. 예산 재정 연구동향 작성
교육예산 분석팀	3명	☐ 소관 상임위원회(운영, 교육) 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 분석 및 조사 분석) 라.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결산 관련 총괄 마. 예산안·결산 분석 총괄 바.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총괄 사. 교육예산 재정 연구동향 작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인사, 조례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경기도의회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는 비용추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어 충청남도 의회에서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은 국회예산처와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였기 때문일 것임

○○○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세출	○							
	○							
	소계							
세입	○							
	○							
	소계							
총 비용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 의견
6.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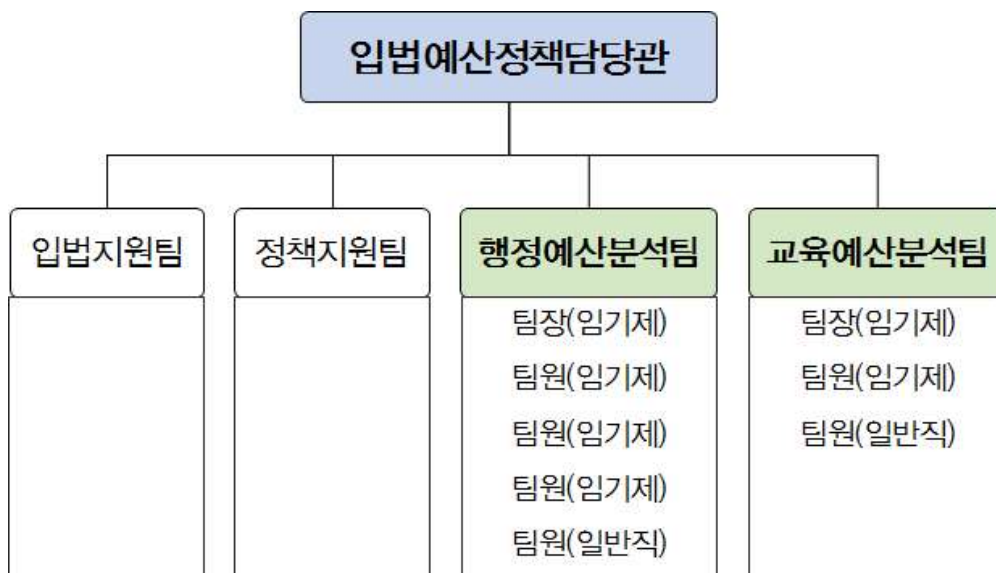
[그림 19] 충청남도의회 비용추계서 서식(안)

■ 수행 사무에 적합한 인력 충원

- 예·결산분석 조직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하므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함
 -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 인사체제로 인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중기적으로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점차 대체하여야 함
- 그러나 전체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경우 본청 및 교육청과의 연계, 조직내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비율의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에 배정된 인력 활용

- 2019년 현재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에 각각 4인으로 총 8명의 정원이 배정되었으나, 현원은 6명임
- 예·결산분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원 인력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1인의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의회는 1개 상임위원회에 1인의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임기제 공무원은 6개의 상임위원회에 대해 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 팀장은 총괄업무를 병행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적은 위원회를 팀장에게 할당하여 팀장이 담당 팀의 업무를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행정예산분석팀(가칭)과 교육예산분석팀(가칭)에 각각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각각 5명과 3명의 인력을 배치함
- 그리고 행정예산분석팀(가칭)에는 4명의 임기제 공무원과 1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교육예산분석팀(가칭)에는 2명의 임기제 공무원과 1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함



[그림 20]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중기 1안

2) 중기 2안

- 중기적 관점에서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중기 2안은 예·결산분석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독립성(객관성) 제고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서, 이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수행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원규모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인력배치, 조직구조,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구성

- 예·결산분석 조직의 수행업무를 전문분석업무 분야와 제도 및 행정 업무분야로 분류한 후, 예산분석1팀, 2팀(가칭)과 예산정책팀(가칭)이 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
 - 현재의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은 단순히 인력을 동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예산조사팀 명칭은 수행업무에 적합하지 않음
- 예산정책팀, 예산분석 1팀, 예산분석 2팀의 구조는 수행업무를 정책지원 기능과 예산분석 기능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한 것임
- 이러한 구성은 예·결산분석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객관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의안비용추계 및 현안분석 업무범위 확대

- 중기 1안과 동일하게 업무범위를 예산분석 및 결산분석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현안분석, 시책분석, 기획분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충남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 의안비용 추계는 조례와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임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충남도의회 의원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이와 함께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및 조례 담당, 예산업무 관련 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업무는 업무성격 및 인력구성에 맞춰 예산정책팀에서 수행하도록 함

[표 41]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중기 2안의 업무분장

구분	인원	담당업무
예산 정책팀	3명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인사, 조례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
예산분석 1팀	3명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기획 분석 및 조사 분석) 라. 출자출연기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분석 마.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충청남도청 예산안·결산 관련 총괄 바. 예산안·결산 분석 총괄 사.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총괄 아. 예산 재정 연구동향 작성
예산분석 2팀	3명	☐ 소관 상임위원회(운영, 교육, 안전건설해양소방) 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 분석 및 조사 분석) 라.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결산 관련 총괄 마. 예산안·결산 분석 총괄 바.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총괄 사. 교육예산 재정 연구동향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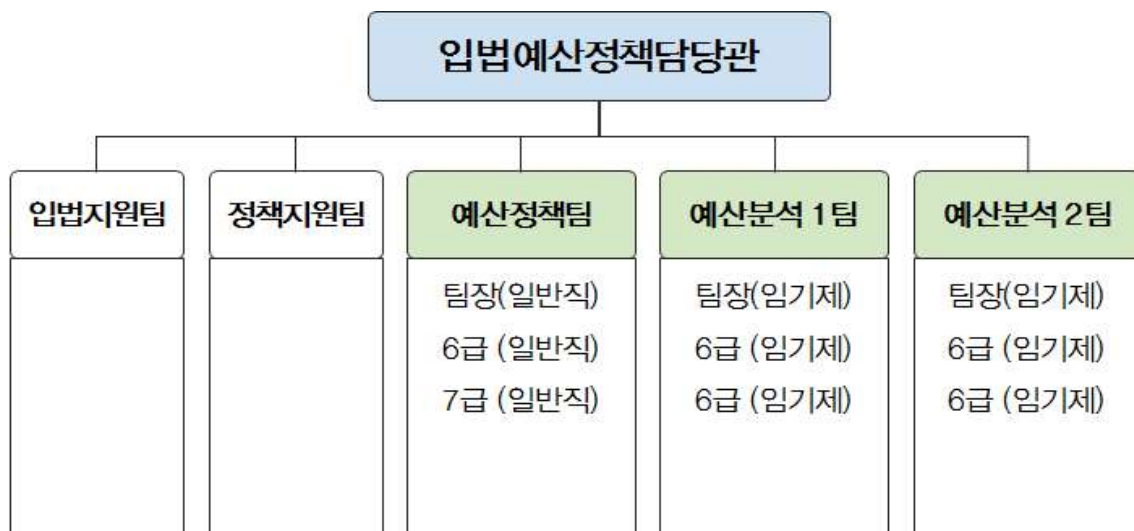
- 종합하면, 예산정책팀(가칭)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인사, 조례 업무와 예산정책의 조사 및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예산분석1팀(가칭)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담당하고, 예산분석2팀(가칭)은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안전건설해

양소방위원회를 담당함

- 현안·시책·기획 분석업무와 의안의 비용추계 등의 업무는 예산분석 1팀과 2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함

■ 수행 사무에 적합한 인력 충원

- 중기 1안과 동일하게 예·결산분석 조직을 장기간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함
- 한편, 일반직 공무원은 본청과의 네트워킹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예산정책팀 인력은 일반직으로 구성함
 - 예산정책팀은 예산분석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사, 조례 개정, 예산정책의 수립 등을 실시함



[그림 21]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중기 2안

- 예·결산분석 조직의 현재 정원을 모두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함
 - 현재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에 각각 4인으로 총 8명의 정원인력이 배정되었고, 현재는 6인만 충원되어 있음
 - 예·결산분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원인력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산분석 1팀(가칭)과 예산분석 2팀(가칭)의 인력은 6개 상임위원회를 1인씩

- 담당해야 하므로 각각 3명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함
- 예산정책팀은 3명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정원규모를 9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장기안

- 장기적 관점에서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예·결산분석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범위와 업무량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향임
- 입법정책분야와 예산정책분야는 다른 관점의 독립된 분야이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 예산정책 업무 분야의 독립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업무량 및 인력 등의 여건이 사전에 조성되어야 가능함

■ 업무수행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예·결산분석 조직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예산정책담당관(가칭)을 설치함.
단, 별도의 조직구성은 담당관 위상에 맞는 인원수와 업무량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인력규모가 타 담당관 조직과 유사한 정도로 증가할 경우에 담당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만 별도의 예산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있음
- 중기적으로 현안·시책·기획분석, 의안비용추계 등의 업무가 추가된 이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업무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단계임
- 예·결산분석 조직을 예산정책팀(가칭)과 예산분석팀(가칭)으로 구성함
 - 예산분석팀(가칭)이 모든 예·결산분석 및 비용추계 등의 업무를 전담함
 - 예산정책팀(가칭)은 예산분석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인사, 조례 개정, 예산정책의 수립 등의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함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업무수행이 전문화되고 종합화될 수 있도록 예·결산분석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설정함

- 업무의 전문화와 종합화는 예·결산분석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함

[표 42] 예·결산분석 조직 개선 장기안의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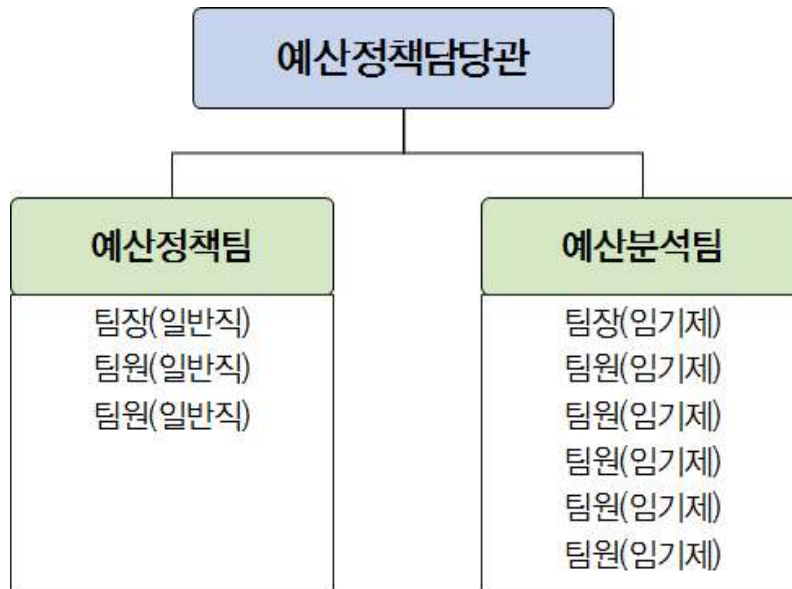
구분	인원	담당업무
예산 정책팀	3명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인사, 조례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
예산 분석팀	7명	☐ 상임위원회 가. 예산안·결산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 분석 및 조사 분석) 라. 기금운용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결산 관련 총괄 마. 예산안·결산 분석 총괄 바.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총괄 사. 교육예산 재정 연구동향 작성

■ 수행 사무에 적합한 인력 충원

- 중기 1, 2안과 마찬가지로, 예·결산분석 조직의 업무성격에 맞게 예·결산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함
 - 예산분석팀(가칭)의 전체 인력을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함
- 예산정책팀은 본청 및 교육청과의 네트워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함

■ 예·결산분석 인력 및 총괄기능 수행 인력 확충

- 예산분석팀(가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의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본 6명과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이 확충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수행 업무가 확대되면, 총괄기능 인력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그에 따라 충남도의회 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6개일 경우를 전제하여 정원규모는 10인으로 확대함



[그림 22]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인력 개선 장기안

2. 제도적 지원 방향

1) 점진적인 자료요구권 제도화 및 자료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 자료요구권의 점진적 제도화

- 예·결산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요구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즉시 강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신뢰, 협조 관계 구축을 통한 자료협조를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의원 대상 의견조사결과, 기존의 요청제도나 협조관계를 통한 자료 구득 의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타 지자체에서도 자료요구권 제도화가 보편화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의회는 본청과 의회 예·결산분석 조직과의 신뢰문화 구축을 통해 자료요구 및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남도의의회, 경상남도의의회 등 또한 자료요구권이 제도화되지 않음
 - 그에 반해, 경기도의회 사례는 자료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료협조를 받고 있음

■ 자료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 예·결산분석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료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본청 및 대상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필요 자료의 요구 절차, 요구 횟수,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시, 본청 및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설치 필요성

- 예·결산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을 통해 개선사항이 도출되어야 함
- 또한,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예산 및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의정역량을 증진할 수 있음
 - 의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위원회 구성

- 예산·기금, 재정·경제 및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 의원의 수요가 반영되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에 관한 자문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정기적 조직진단 실시

■ 조직진단의 목적

- 예·결산분석 조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의회사무처 내 타 조직의 기능과 구조가 효율적인지, 인력이 적정한지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충원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결산분석 조직의 설치 및 인력확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진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예·결산분석 인력은 기존의 전문위원과 최근에 증원된 정책연구원 등으로 인해 중복된 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예·결산분석 조직의 존립의 이유를 확인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객관적인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인력확충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외부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우 2016년에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예·결산분석 조직을 신설함

■ 조직진단의 실시 방법

- 조직진단은 조직의 기능, 구조의 효율성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의회, 의회사무처나 예·결산분석 조직과 관련성이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함
 - 예를 들어, 한국행정연구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중앙정부 소속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본청은 2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주기에 맞춰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상임위원회와의 협업관계 구축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예·결산분석 조직 간 업무중복 가능성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담당업무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음. 이는 예·결산분석 조직과의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전문위원실은 예산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산안이 전달되면 담당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함
 -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표 43] 예산분석 부서간 담당 역할 및 인력 현황

구분	예산 관련 업무 현황	인력	비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예산안 검토	42	- 예산안 검토 외에 조례안, 청원 등 안건 검토 등 운영 업무 수행 - 19명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예·결산분석 조직	•예산안·결산 분석 •예산안·결산 사업 분석 •재정 관련 정책 현안 등 분석 •재정 연구 동향 작성	6	

- 따라서 예·결산분석 조직은 전문위원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한 분석 및 특정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예·결산분석 조직이 종합적인 예산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사업별 예산 분석 전단계에서 예산총괄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 수준으로 이루어짐
 - 서울특별시의회의와 경기도의회의 예·결산분석 조직에서 작성한 예산분석보고서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예산총괄 분석부분이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결산분석 조직은 예산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업무 간 차별성을 명확히 하면서, 전문위원실과 예·결산분석조직 간 협업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전문위원실과 예·결산분석 조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재정의 민



- 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두 부서 간 협업은 설치 목적상 당위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의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업무성과를 전달하는 협업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 예·결산분석 조직은 사무의 특성상 객관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의원으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제2항은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다’고 규정됨
- 그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의원이 직접적으로 예·결산분석 조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전문위원실이 예·결산분석 조직과 상임위원회 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예·결산분석 조직에 전달하여 의원의 수요에 맞는 분석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예산 및 결산 분석 주제 선정시 사전에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받아 의원의 수요를 파악함
- 예·결산분석 조직은 상임위원회가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나 정책연구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5) 예·결산분석 조직 성과 공개

- 충남도의 주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성과를 의무적으로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결산분석 조직의 성과를 공개함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 예·결산분석 조직의 성과물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결산분석 자료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직접적으로 충남도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충남도의회는 활동 성과의 공개를 통해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음

6) 외부기관과의 협업구조

- 예·결산분석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복지재단,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업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분석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효과 분석을 포함하므로, 각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의 도움을 활용하여야 함

3. 예·결산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예·결산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2년차까지는 수행업무를 정착하는 과정임
 - 예산분석, 결산분석 업무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함. 사업별 분석외에 분야별, 부문별 총괄분석을 실시하여 예산분석의 전체 틀을 정착시켜야 함
 - 현안·시책·기획분석 업무와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량 및 필요인력을 파악하여야 함
- 3년차부터 3년간은 점진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필요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임기제공무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임
 - 현안·시책·기획분석 업무와 의안비용추계 업무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를 정착시킴
- 2028년 시점에서는 수행하는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결산분석 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 예·결산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

- 이 과정에서 인력 확충 및 조직 재구성은 업무량 파악, 조직·인력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예·결산분석 조직이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제6장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모형 및 사례

제1절 예산분석 모형

제2절 사례1: 저출산대책 사업

제3절 사례2: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

제4절 사례3: 고교무상교육 현황 및 향후 재원부담

제1절 예산 분석 모형

1. 예산분석의 기본 방향

■ 예산분석 사례 유형

-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분석 외에 주요 재정사업 분석, 현안사업 분석, 시책사업 분석 등을 실시함
- 이러한 예산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분석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석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사업별 예산분석에서 특정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못할 경우 주요 재정사업 분석이나 현안사업 분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는 예산분석을 총괄분석, 주요분야별 예산분석, 위원회별 예산분석 등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예산분석을 실시함
- 그에 반해, 최근에 예·결산분석 조직을 설립한 경상남도의회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만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그리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산분석보다는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예산분석, 결산분석 외에 시책사업분석이나 현안사업분석 등 추가적인 사업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워 예산분석을 시책사업분석이나 현안사업분석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의회의 예산분석 방향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은 설치된 지 1년 미만 조직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경상남도의회 사례와 같이 사업에 대한 분석과 현안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예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4] 예산분석 사례 유형과 충청남도의회의 방향

구분	유형 1	유형 2
특성	- 주요 사업 예산분석 위주 구성 - 단위사업 또는 정책사업 수준에서 분석 실시 - 총괄분석, 주요분야별 분석 등 부재 - 사업별 10페이지 내외 분석	-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예산분석 - 총괄분석, 주요분야별 예산분석, 위원회별 예산분석, 세부사업 단위 분석 등 포괄 - 세부사업 단위 간략한 분석 위주 (4페이지 내외)
사례	경상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적용 방향	1~2년간 적용	5년 이내 정착

2. 예산분석의 대상

■ 총괄분석 및 위원회별 개별사업 분석

- 서울특별시의회 사례가 예산분석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에 중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분석 보고서는 충청남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및 교육청의 예산 전반에 대한 정리자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재정운영방향, 분야별 재정운영방향 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또한 실국별 예산 추이, 세입·세출 분석, 주요사업 현황,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사업 선정기준

- 분석대상 사업은 예·결산분석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함
-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 의원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예: 농업보조금 및 복지보조금, 민간위탁비 등)
- 사업의 파급효과 크기(대상 주민 수, 대상지역 범위 등)
- 예산규모
- 신규사업 여부
- 전년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
- 시책사업
- 이전에 분석을 실시한 사업과 계속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 인력이 수용가능한 업무량에 근거한 사업수 결정

- 6명의 현 인력수와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석량을 결정하여야 함
- 현재 조직이 정착과정에 있고 인력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분석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함

3. 예산분석의 방법

■ 도민의 관점 반영

-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적극 실시하여 도민과의 직접적 면담 등을 활용함

■ 사업효과 파악

-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
-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활용함

■ 사업별 자원 증감 과정 모니터링

- 특정 사업이 본예산, 추경의 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함



4. 예산분석의 내용

■ 예산분석 구성

-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등의 예산분석은 모두 동일하게 예산안, 사업내용, 분석의견으로 구성됨
-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또한 예산안, 사업내용, 분석의견으로 구성함

■ 예산액 비교

- 사업의 예산안 내용 정리시, 전년도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제시하여 예산의 흐름을 여러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명									당초예산서 페이지 과	
☐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현황								2019년 예산현황	
	2018 본예산	2018 1회 추경	2018 2회 추경	2018 예산 현액 (A)	2018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2018 집행 잔액 (A-B-C)	2018 집행률 (B/A)	2019 예산액 (D)	증감액 (D-A)
☐ 현황 또는 사업내용 ☐										
☐ 분석의견 ☐										

[그림 24]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주요내용(안)

제2절 사례1: 저출산 대책 사업

1. 예산

■ 전체 예산 현황

- 본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의 성격이 강한 출산보육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예산분석을 실시함
 - 충청남도의 저출산 대책 사업은 출산보육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미래정책과, 일자리노동청년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음
 - 그로 인해 저출산대책 사업을 추출하기 어려움
 - 매년 작성되는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기본 시행계획의 대상사업에서 연도 간 일관되지 않은 사업이 발견됨
- 사업의 2019년 예산규모는 5,418억원으로 2018년 예산 4,441억원보다 977억원 증가함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 구분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A)	증가율(%)
전체	총계	444,090	541,769	97,679	22%
공통사업	계	419,372 (94.4%)	508,841 (93.9%)	89,469	21.3%
	국비	335,627	403,275	67,649	20.2%
	지방비	83,746	105,566	21,820	26.1%
자체사업	지방비	24,718 (5.6%)	32,928 (6.1%)	8,210	33.2%

주) 2018년, 2019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임

- 전체 사업 중 자체사업은 32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1%를 차지하고 공통사업은 5,08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3.9%를 차지함
- 자체사업비는 2018년 예산보다 82억원이 증가하였고, 공통사업비는 895억원이 증가함



■ 부서별 예산 현황

- 2019년 기준 예산 중 출산보육정책과 소관 비율은 약 94%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6% 정도임
- 출산보육정책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1,975억원임
-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33억원임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제4조)
- 2) 저출산 대책 (제2장 제1절)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3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0조)
 - 연도별 시행계획(제21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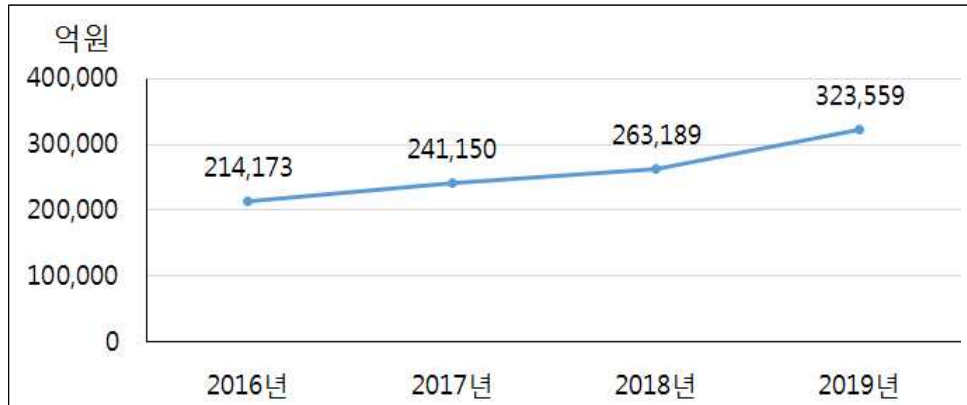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저출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충청남도의 책무 (제3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추진
시행계획 (제6조)	-
지원사업 (제7조)	1. 난임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 포함)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5. 인구교육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결혼할 의사를 가진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 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9.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0.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11.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12.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구교육 (제11조)	-
기업·단체 등의 지원 (제13조)	-
교육 및 홍보 (제14조)	-
저출산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 16조)	-

■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 사업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 사업을 추진 중임
- 2019년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과 ‘2019년도 시행계획’이 시행 중임
- ‘2019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9년 저출산 분야 예산은 323,559억 원임(지방비 포함)



주1) 2019년 수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기준

주2) 국비와 지방비 포괄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사업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서는 충청남도의 2019년도 저출산 대책 분야 핵심사업을 제시함
-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충남아이키움뜰 설치·운영의 6가지 사업임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분야 2019년 핵심 과제〉

- ☐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남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
 - 대중교통수단(시내버스)에 임신부 배려석 설치로, 임신부 배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 충남형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놀이뜰」건립으로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이전)

□ 충남아이키움뜰 설치·운영

- 일시적·야간 긴급 보육수요(병원이용·야근·경조사 등) 발생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실현
 - 옛 도지사 관사 활용,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전담보육서비스* 제공
 - * 주·야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도서대여,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 충남아기수당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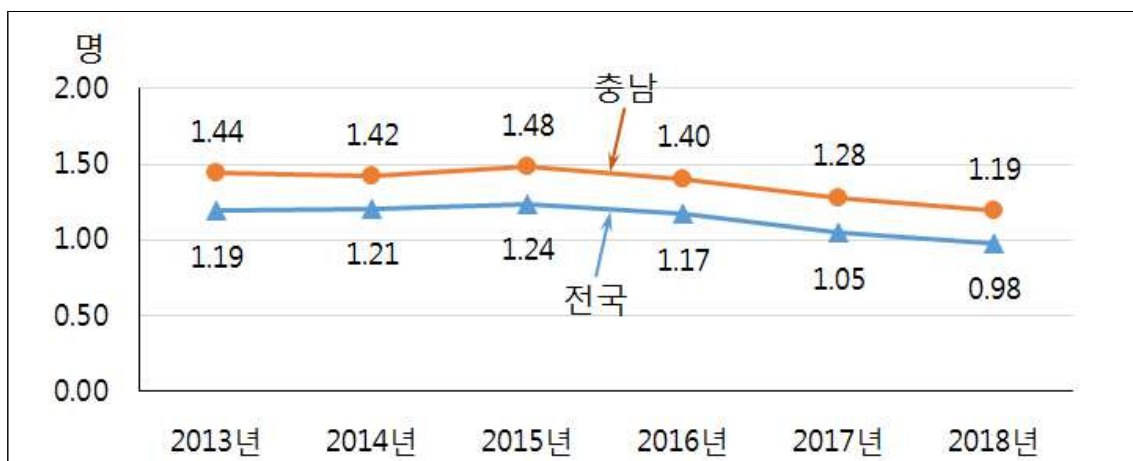
- 출산장려와 출산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실현. 아기 18,840명에게 충남아기수당 22,600백만원 적기 지원

자료: 충청남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 충청남도 출산율 현황

- 통계청의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년(1.05명)보다 0.08명(-7.1%) 감소함

〈충청남도와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



주) 2018년 수치는 통계청 잠정 결과임

자료: 충청남도 통합복지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welfareMain.do>)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초저출산율 진입값인 1.3명 이하로 내려왔고 2018년에는 1.19명(잠정)으로 전년(1.28명)보다 0.09명(-7.0%) 감소함
- 전국과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충청남도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예산군이 1.05명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부여군, 태안군이 1.09명으로 낮음
- 그에 반해, 당진시는 1.6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산시가 1.53명, 아산시가 1.4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17년 시군별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명)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1.16	1.15	1.17	1.40	1.53	1.19	1.44	1.65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남평균
1.16	1.09	1.14	1.10	1.37	1.05	1.09	1.28

자료: 충청남도 통합복지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welfareMain.do>)

- 충청남도의 출생아수는 2018년에 14,400명이고 조출생률은 6.8명에 불과함
- 조출생률은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임
- 가임여성인구는 2018년에 457,455명이고 비율은 44.2%로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충청남도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가임여성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생아수	20,398	20,448	18,628	18,200	18,604	17,302	15,670	14,400
조출생률	9.8	10.2	9.2	8.9	9.0	8.3	7.5	6.8
합계출산율	1.50	1.57	1.44	1.42	1.48	1.40	1.28	1.19
가임여성인구	489,443	469,422	469,189	468,414	466,154	464,830	462,783	457,455
가임여성 비율	47.8%	47.3%	47.0%	46.5%	46.0%	45.5%	45.0%	44.2%

주1) 2018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잠정 결과임

주2) 조출생률은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

주3)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자료: 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연간 인구동향

3. 분석의견

■ 예산의 실효성 확보

- 지난 몇 년간 저출산 대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 출산율 모두 하락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22%의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자체사업을 전년 대비 33.2% 증가시킴
- 그 동안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2017년에 초저출산율로 진입하여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음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등의 순으로 응답함¹²⁾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¹³⁾

<매경이코노미 전국 20~3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수행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
- 또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충청남도에는 없는지 검토해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료에¹⁴⁾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의 특성〉

구분	내용
자체사업 여부	■ 공통사업 유사성 - 공통사업과 차별화된 특화적 자체사업 부족
생애이행 단계	■ 출산·보육 편중 - 출산 이전 출산동기 부여 정책 미흡
정책 대상	■ 보편적 접근 - 수요 부합성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미비
정책 수단	■ 간접적 지원 편중 -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 미비
정책 목표	■ 핵심요인 고려 미흡 - 지원대상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 적극적 정책 미비

자료: 강영주·금창호. (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 중앙일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2016.8.11

13) 매일경제, 저출산에 대한 국민 생각 | 아이 꼭 낳아야 하나?...아니요 51%, 2019.3.15

14) 강영주·금창호. (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여건을 반영한 자체 저출산 사업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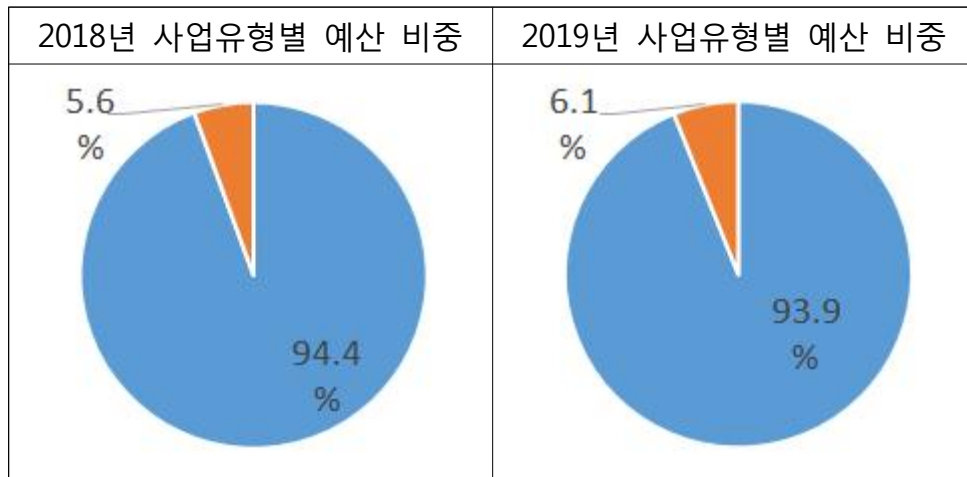
- 충청남도 2019년 저출산 대책 사업 중 공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9%이고 자체사업의 비중은 6.1%에 불과함
- 공통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충청남도 지역여건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충청남도의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북부 산업화 지역인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는 상대적으로 높고 부여, 예산, 태안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저출산 환경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특화 핵심 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의 ‘백화점식’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점식’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함
 - 각 지역의 주요 정책대상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저출산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¹⁵⁾

〈충청남도 저출산 예산 구분〉

(단위: 천원, %)

재정 구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총계	444,090,248	100%	541,769,372	100%
공통사업	419,372,467	94.4%	508,841,272	93.9%
자체사업	24,717,781	5.6%	32,928,100	6.1%

15) 강영주·금창호. (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관리 강화

- 충청남도는 저출산 대책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매년 작성되는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는 시군, 교육청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고, 충남도 과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저출산 대책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의 세분화된 사업들이 어떠한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도에 수립된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에 추진 전략과 추진목표가 있음
 - 각각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 현황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의 비전과 추진목표〉

비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목표 : 합계 출산율 1.66명				
추진 전략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2.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양육 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추진 목표	1-1. 주거 지원 1-2. 결혼 지원 1-3. 청년·일자리 지원	2-1. 임신·출산 안심 체계 구축 2-2. 임신·출산 비용 지원 실효성 강화 2-3. 다양한 가정의 임신부 지원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4-1.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축 4-2.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과제	9개 과제	9개 과제	8개 과제	8개 과제

■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대상 정책 추진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함
- 충청남도 내의 사업체 중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142,358개이고 종사자는 567,242명임

〈충청남도 중소기업 현황〉

구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계	소기업	중기업	
사업체수	142,595 (100.0%)	142,358 (99.8%)	139,489 (97.8%)	2,869 (2.0%)	237 (0.2%)
종업원수	754,151 (100.0%)	567,242 (75.2%)	431,020 (57.2%)	136,222 (18.1%)	186,909 (24.8%)

자료 : 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5~9인 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 준수율이 3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민간기업이 출산지원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¹⁶⁾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자는 9만123명으로 집계됐다.¹⁷⁾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전히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지켰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준수했다. 통계청은 "사회동향 육아휴직 통계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

■ 저출산 대책 사업의 연관성 강화 필요

-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이 저출산 대책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 보장과 기회균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서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에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음
- ‘고교 무상급식’ 또한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어려움
 - ‘고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확장에 보다 가깝게 생각됨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출산보육정책과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저출산 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의 저출산 대책의 규모를 적게 인식하도록 하므로 명칭 변경 필요

16) 연합뉴스, 성인 93% "저출산정책, 출산장려→삶의질 제고 전환해야", 2018.12.5.

17) 매일노동뉴스,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2018.12.14.

제3절 사례2: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

1. 예산

■ 전체 예산 현황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의 2019년 예산규모는 211억원으로 2018년 확정예산 170억원보다 41억원 증가함
- 전체 사업 중 자체사업은 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를 차지하고 공통사업은 20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7.9%를 차지함
- 자체사업비는 2018년 최종예산보다 238억원이 감소하였고, 공통사업비는 43억원이 증가함
 - 2018년 최종예산에서는 자체사업이 4%를, 공통사업이 96%를 차지하였음

〈충청남도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B)	증감	
		당초예산	확정예산 (A)		증감액 (B-A)	증가율(%)
전체	총계	10,847.9	17,001.1	21,057.7	4,056.6	23.9
공통사업	계	10,189.9	16,313.1	20,608.2	4,295.1	26.3
	국비	8,139.7	12,360.0	14,378.1	2,018.1	16.3
	지방비	2,050.2	3,953.1	6,230.1	2,277.0	57.6
자체사업	지방비	658.0	688.0	449.5	-238.5	-34.7

자료: 충청남도, 2018년, 2019년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서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26조(방지시설설치등),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또는 천연가스 버스를 대·폐차하는 운수업체에 지원 - 천연가스버스 1대당 12,000천원(국비6,000천원,도비3,000천원,시군3,000천원) - '19년 천연가스자동차 40대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영세 사업장 또는 기술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현장 방문 등 기술 지도 실시 - 도내 680개 배출업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휘발유차량 구매 차액 지원 - 2019년 전기자동차 679대(전기자동차 677대, 전기버스2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중소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때 비용 보조 - '19년 저녹스버너 21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동급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가격차액을 정액 지원 - 전기이륜차 200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폐차 보조금 지원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DPF, p-DPF)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3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7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5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05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사업	- 도내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환경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도로청소차량 구입 지원을 통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 등 대기질 개 선 - 아산시 1대 보급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 활동지역 및 인구 유동이 많은 장소에 미세 먼지 정보 알림판 설치 - 미세먼지 알림판 36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 속 측정망) 신설·교체비용(50%) 지원 - 측정망 1식
충남 환경보전 홍보	- 미세먼지 바로 알기, 도 미세먼지 정책 연중 홍보로 도민 불안 해소, 대중교통 생활화, 불법 소각 금지 등 도민 생활 문화 개선을 통한 미 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 등 - 지역신문 홍보, 홍보 배너 및 리플렛 제작 1식

■ 미세먼지 개요

- 미세먼지의 정의, 생성원인, 성분, 건강영향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정의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 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생성원인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 접 발생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 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 황사), 소금입자, 생물성입자(예: 꽃가루, 미생물) 등이 있음
성분	미세먼지 구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건강영향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 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킴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 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킴
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μ g/m ³ 이하 초미세먼지(PM2.5) : 연간평균치 15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μ g/m ³ 이하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제3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연평균 $40\mu\text{g}/\text{m}^3$ 이하와 24시간 평균 $80\mu\text{g}/\text{m}^3$ 이하임
 -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연평균 $20\mu\text{g}/\text{m}^3$ 이하와 24시간 평균 $40\mu\text{g}/\text{m}^3$ 이하임

〈충청남도 대기환경기준〉

항 목		기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 ₂)	연평균	0.01ppm 이하	자외선흡광측정법 (Pulsed U.V. Fluor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	0.03ppm 이하	
	1시간 평균	0.1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₂)	연평균	0.02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24시간 평균	0.04ppm 이하	
	1시간 평균	0.08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	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1시간 평균	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평균	$40\mu\text{g}/\text{m}^3$ 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 평균	$80\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평균	$20\mu\text{g}/\text{m}^3$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24시간 평균	$40\mu\text{g}/\text{m}^3$ 이하	
오존(O ₃)	8시간 평균	0.06ppm 이하	자외선흡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1시간 평균	0.1ppm 이하	
납(Pb)	연평균	$0.3\mu\text{g}/\text{m}^3$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평균	$3\mu\text{g}/\text{m}^3$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현황**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PM10)은 ‘0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2년에는 $41\mu\text{g}/\text{m}^3$ 으로 크게 낮아진 이후 ‘16년에는 다소 증가한 $48\mu\text{g}/\text{m}^3$ 를 나타냈다가, ‘17년에는 $44\mu\text{g}/\text{m}^3$ 의 농도를 보임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고, 환경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mu\text{g}/\text{m}^3$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 기준인 연평균 $40\mu\text{g}/\text{m}^3$ 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연평균 $20\mu\text{g}/\text{m}^3$ 과 EU(유럽연합)의 기준인 연평균 $40\mu\text{g}/\text{m}^3$ 보다 높은 수준임
-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5년 1월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추가로 설정된 이래로 매년 낮아져 '17년에 $23\mu\text{g}/\text{m}^3$ 의 수준을 보임
- 이러한 수치는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인 연간평균치 $15\mu\text{g}/\text{m}^3$ 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충청남도 환경기준인 $20\mu\text{g}/\text{m}^3$ 보다 높은 수치임
-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PM2.5)의 기준인 연평균 $10\mu\text{g}/\text{m}^3$ (일평균: $25\mu\text{g}/\text{m}^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추이〉

항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PM10 ($\mu\text{g}/\text{m}^3$)	전국	54	53	51	50	45	49	49	48	47	45
	충남	49	47	46	44	41	42	42	46	48	44
PM2.5 ($\mu\text{g}/\text{m}^3$)	전국	-	-	-	-	-	-	-	26	26	25
	충남	-	-	-	-	-	-	-	29	26	23

주1)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주2) PM2.5는 '15.1.1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7, 2018.

- 타 시도와 충청남도의 오염물질별 연평균농도를 비교하면,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전국에서 9번째로 높고, 초미세먼지(PM2.5)는 11번째 순위임
- 충청남도의 이산화질소는 13번째이고, 이산화황은 16번째로 낮음



〈2017년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평균농도 순위〉

번호	시도	SO2	시도	NO2	시도	PM10	시도	PM2.5
1	인천	0.006	서울	0.030	경기	51(50)	전북	29(28)
2	울산	0.006	경기	0.027	전북	48(47)	경기	27(27)
3	서울	0.005	인천	0.024	세종	47(45)	충북	27(27)
4	부산	0.005	울산	0.022	인천	46(44)	부산	26(26)
5	경기	0.005	부산	0.020	대전	45(44)	강원	26(26)
6	전남	0.005	대구	0.020	부산	44(43)	서울	25(25)
7	전북	0.004	세종	0.020	강원	44(43)	인천	25(25)
8	경북	0.004	광주	0.019	충북	44(43)	울산	25(25)
9	경남	0.004	충북	0.019	충남	44(43)	광주	24(24)
10	대구	0.003	경남	0.019	서울	44(42)	대구	23(23)
11	광주	0.003	대전	0.018	울산	43(42)	충남	23(23)
12	대전	0.003	강원	0.016	경남	43(42)	경북	23(23)
13	세종	0.003	충남	0.016	대구	42(42)	경남	23(23)
14	강원	0.003	전북	0.015	광주	40(39)	세종	23(22)
15	충북	0.003	경북	0.015	경북	40(39)	제주	22(22)
16	충남	0.003	전남	0.014	제주	37(36)	대전	21(21)
17	제주	0.002	제주	0.011	전남	36(34)	전남	20(20)

주) ()안의 값은 황사일자 제외 평균값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 2017년에 미세먼지(PM10)의 주의보 일수는 8회이고 횡수는 6회임

〈2017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항목	PM10 ($\mu\text{g}/\text{m}^3$)		PM2.5 ($\mu\text{g}/\text{m}^3$)	
	주의보일수(횡수)	경보일수(횡수)	주의보일수(횡수)	경보일수(횡수)
계	25(188)	4 (17)	42 (128)	1 (1)
서울	10 (6)	-	10 (5)	-
부산	5 (12)	-	6 (4)	-
대구	4 (3)	-	4 (2)	-
인천	14 (25)	1 (4)	17 (19)	-
광주	8 (5)	-	12 (7)	-
대전	3 (9)	3 (2)	2 (2)	-
울산	2 (2)	-	2 (2)	-
세종	6 (6)	1 (1)	5 (3)	-
경기	22 (40)	1 (4)	23 (30)	-
강원	18 (23)	1 (2)	21 (17)	1 (1)
충북	10 (11)	-	11 (10)	-
충남	8 (6)	1 (1)	2 (1)	-
전북	9 (4)	-	10 (6)	-
전남	4 (7)	2 (1)	-	-
경북	5 (23)	2 (2)	18 (18)	-
경남	4 (3)	-	-	-
제주	4 (3)	-	3 (2)	-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들에게 대비하도록 알려 주고 오염수준별 국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케 하는 제도임
- 미세먼지 경보는 시·도별 미세먼지 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발령되며 아래와 같이 주의보, 경보의 2단계로 운영되며, 인터넷, 방송,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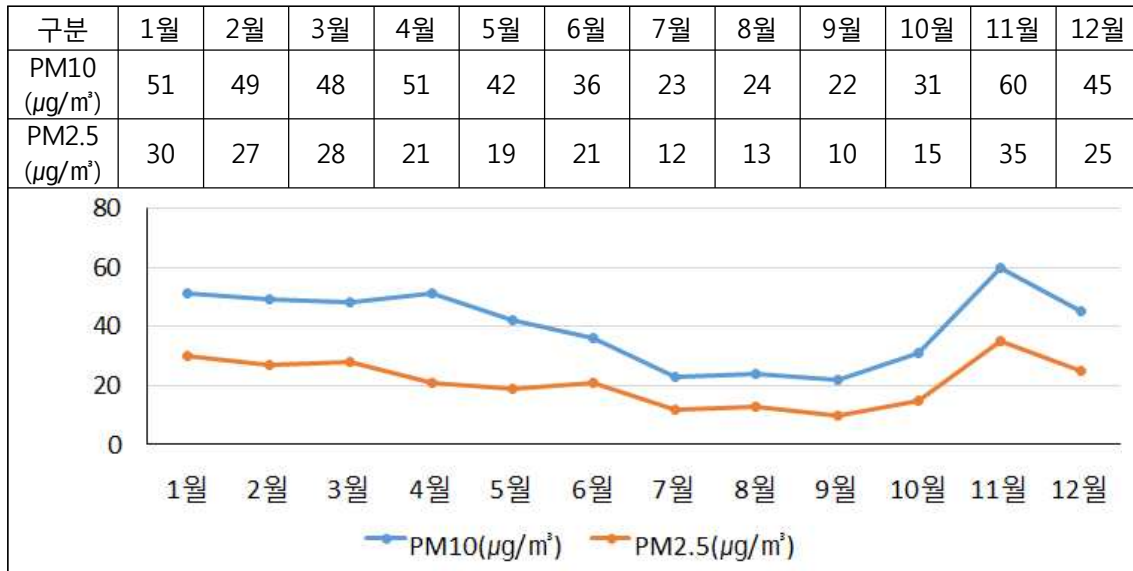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충청남도의 월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PM10과 PM2.5 모두 1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세먼지(PM10)는 11월에 $60\mu\text{g}/\text{m}^3$ 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25\mu\text{g}/\text{m}^3$ 임
 - 미세먼지는 11월부터 5월까지 충청남도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미세먼지는 11월부터 4월까지 연속적으로 충청남도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

〈2018년 충청남도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충청남도의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당진시의 PM10과 PM2.5 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아산, 천안 등이 높게 나타남

〈2018년 충청남도 시군별,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단위 : $\mu\text{g}/\text{m}^3$)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천안	55 (36)	52 (33)	54 (35)	54 (23)	41 (19)	35 (20)	24 (15)	24 (14)	21 (10)	32 (19)	71 (44)	53 (31)	47 (25)
당진	59 (33)	60 (29)	52 (32)	57 (24)	52 (26)	44 (28)	26 (14)	27 (14)	25 (12)	39 (19)	67 (40)	56 (32)	52 (25)
서산	46 (25)	47 (26)	42 (25)	45 (17)	39 (15)	31 (20)	22 (13)	26 (14)	23 (9)	29 (13)	51 (24)	38 (18)	40 (18)
아산	58 (43)	53 (32)	53 (34)	57 (25)	49 (24)	41 (23)	23 (11)	27 (12)	24 (8)	37 (15)	72 (43)	51 (30)	49 (25)
논산	53 (25)	53 (23)	47 (23)	52 (21)	40 (19)	38 (22)	24 (15)	22 (13)	20 (9)	33 (12)	55 (26)	45 (23)	44 (19)
태안	48 (21)	48 (22)	44 (22)	48 (20)	41 (18)	36 (21)	27 (13)	26 (14)	21 (10)	26 (13)	46 (22)	33 (15)	40 (18)
보령	45 (33)	41 (25)	46 (27)	46 (20)	38 (18)	35 (21)	20 (12)	22 (12)	19 (8)	30 (14)	59 (34)	42 (25)	39 (17)
홍성	54 (35)	44 (27)	50 (30)	51 (21)	42 (19)	38 (22)	21 (10)	22 (14)	20 (13)	31 (21)	60 (43)	43 (32)	43 (24)



공주	47 (36)	42 (29)	44 (31)	47 (23)	37 (20)	33 (22)	18 (10)	21 (12)	21 (11)	27 (16)	55 (34)	44 (26)	40 (23)
부여	57 (25)	54 (22)	47 (22)	52 (21)	42 (18)	39 (21)	25 (14)	24 (14)	21 (11)	29 (15)	51 (28)	40 (20)	45 (19)
청양	43 (29)	42 (25)	42 (28)	44 (21)	33 (17)	29 (19)	18 (11)	20 (14)	19 (13)	27 (20)	53 (39)	42 (29)	38 (22)
금산	44 (26)	42 (24)	40 (26)	49 (21)	37 (18)	33 (20)	24 (15)	23 (14)	19 (10)	23 (11)	50 (27)	41 (22)	39 (20)
예산	52 (27)	46 (20)	47 (21)	49 (15)	43 (14)	35 (22)	23 (13)	25 (14)	23 (10)	31 (17)	62 (40)	47 (29)	44 (20)
계룡			49 (24)	46 (18)	32 (14)	28 (16)	20 (11)	20 (10)	18 (8)	25 (12)	47 (25)	41 (19)	37 (16)
서천			46 (22)	45 (18)	35 (15)	32 (17)	21 (11)	23 (11)	21 (8)	31 (13)	50 (28)	38 (21)	37 (16)

주: ()는 PM2.5 ($\mu\text{g}/\text{m}^3$)를 의미함

자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중 SOx, NOx,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2016년에 273,932톤으로, 전국의 배출량 1,940,593톤에서 14.1%를 차지하여 전국 1위 수준임
- 2위 경기도는 263,096톤이고, 3위 경상북도는 218,067톤임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 현황〉

(단위 : 톤)

구분	합계	NOx	SOx	PM10	PM2.5	비고
전국	1,940,593	1,248,309	358,951	233,085	100,247	
충남	273,932	134,889	81,843	38,379	18,822	14.1%

주) 2016년 기준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 2016년 충청남도 대기오염의 배출원별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세먼지는 연간 38,379톤이 발생되고 그 중 61.7%가 제조업 연소로부터, 22.4%가 비산먼지로부터 발생함
 - 초미세먼지는 연간 18,822톤이 발생되고 그 중 65.6%가 제조업 연소로부터 발생함
 - 초미세먼지의 상당량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각

각 연간134,889톤과 81,843톤이 생성됨

- 질소산화물(NOx)의 38.5%는 에너지산업 연소로부터 발생하고 22.8%는 도로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함
- 황산화물(SOx)의 36.3%는 에너지산업 연소로부터, 36.2%는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함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SOx, NOx, 미세먼지) 배출원별 현황〉

(단위 : 톤)

배출원	충남 합계	NOx	SOx	PM10	PM2.5
합계	273,932 (100%)	134,889 (100%)	81,843 (100%)	38,379 (100%)	18,822 (100%)
에너지산업 연소	84,566 (30.9%)	51,978 (38.5%)	29,713 (36.3%)	1,591 (4.1%)	1,284 (6.8%)
비산업 연소	4,900 (1.8%)	3,585 (2.7%)	1,177 (1.4%)	82 (0.2%)	55 (0.3%)
제조업 연소	72,417 (26.4%)	17,448 (12.9%)	18,939 (23.1%)	23,681 (61.7%)	12,349 (65.6%)
생산공정	47,676 (17.4%)	15,719 (11.7%)	29,660 (36.2%)	1,303 (3.4%)	994 (5.3%)
도로이동오염원	32,352 (11.8%)	30,736 (22.8%)	15 (0.0%)	834 (2.2%)	767 (4.1%)
비도로이동오염원	17,395 (6.4%)	13,658 (10.1%)	2,163 (2.6%)	821 (2.1%)	753 (4.0%)
폐기물처리	1,029 (0.4%)	835 (0.6%)	167 (0.2%)	15 (0.0%)	13 (0.1%)
기타 면오염원	43 (0.0%)	10 (0.0%)	-	17 (0.0%)	16 (0.1%)
비산먼지	10,047 (3.7%)	-	-	8,614 (22.4%)	1,433 (7.6%)
생물성 연소	3,507 (1.3%)	921 (0.7%)	8 (0.0%)	1,420 (3.7%)	1,158 (6.2%)

주) 2016년 기준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배출원은 에너지산업 연소로서 전체의 30.9%를 차지하고, 다음은 제조업 연소가 26.4%를 차지하며, 생산공정 연소는 17.4%를 차지함
- 이는 서북부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전국 61기 중 30기 배치), 대산석유화학 단지, 제철·철강단지 등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었기 때문임

3. 분석의견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특성에 따른 저감 정책 수립

- 충청남도 ‘16년 대기오염물질(SO_x, NO_x, 미세먼지)은 에너지산업연소(30.9%) > 제조업연소(26.4%) > 생산공정(17.4%) > 도로이동오염원(11.8%) 순으로 발생
-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는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다만, 대형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 충청남도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에너지산업연소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_{2.5})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함

〈 가동중지에 따른 최대영향지점 3~6월 모델링 결과 〉

(단위 : $\mu\text{g}/\text{m}^3$)

구분		중단 전	중단 후	감소량(감소율)
충남 (보령시)	평균	22.5	21.1	1.4(6.2%)
	일 최대	38.0	30.9	7.1(18.7%)
	시간 최대	163.3	137.6	25.7(15.7%)

자료: 환경부 2018년 11월 5일 보도자료,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충남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컸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 충청남도 미세먼지 농도가 11월부터 5월까지 높은 원인의 일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임
- 충청남도 내부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적으로 대외적 협력이 필요함
- 국내적으로 환경부, 타 지자체 등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대중국 교류회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하여야 함

■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중심의 예산사업 구성

- 충청남도 대기오염 배출원은 에너지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럼에도 예산사업의 구성은 배출원의 11.8%를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많은 수를 차지함
 - 총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도로이동오염원 문제를 위한 사업임
-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여야 함

■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대상에 대한 정책 마련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충청남도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대기오염 상태는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대상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미세먼지 대형 오염원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미세먼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도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제4절 사례3: 고교무상교육 현황 및 향후 자원부담

1. 예산

■ 예산 규모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68,551백만원이고 그 중 충청남도과 시·군의 예산이 44,139백만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24,412백만원임
 - 도와 시·군의 자원분담률은 각각 50%임
-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대상은 58,660명임

〈충청남도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사업량 (단위 : 명)	-	58,660	58,660
사업비 (백만원)	-	68,551	68,551

자료: 충청남도,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본 시행계획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담당부서는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임
- 이 사업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세부사업 하위의 편성목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하위에 포함되어 있음
 -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 정책사업 하위의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 단위사업 하위에 위치함
-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에서는 23,456백만원으로 당초 계획금액보다 많음
 - 충청남도과 시·군의 예산의 통합예산이 44,139백만원이므로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규모는 20,683백만원임

2. 사업내용 및 사업 관련 현황

■ 사업목표

-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
- 경제적 지위에 차별받지 아니하는 기회균등 보장
-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¹⁸⁾
 -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실현함

■ 사업 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 과정
 - 2018년 7월에 도-교육청-의회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후 9월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시기, 분담비율을 확정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함
 - 2018년 10월에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2018년 10월에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2018년 10월에는 「충청남도 교과용 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각 시·군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사업 기간 : '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대상은 충남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국립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은 제외함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모니터링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의 76.1%는 현재 정부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불충분 하다고 생각함



- 지원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38,057명임
- 사업 시행주체는 충남교육청, 충남도청, 충남 도내 15개 시·군임
-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시행됨
- 지원내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고,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음
 - 수업료 : 학교별 급지 단가×학생수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별 단가×학생수
 - 교과서비 : 학교별, 학년별, 과목별 교과서 단가×학생수

〈충청남도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예산의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소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비 고
계	68,551	46,737	15,948	5,866	
지자체(도+시군)	44,139	30,089	10,273	3,777	고교 1.2학년
도교육청	24,412	16,648	5,675	2,089	고교 3학년

자료: 충청남도,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본 시행계획

■ 중앙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 고교 무상교육의 목적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임
-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임
 -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됨
- 시행방안
 -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됨

- 소요예산

-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총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년	전학년	126만명	19,951억원

주1)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주2)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9. 4. 9).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 재원확보 방안

-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¹⁹⁾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함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²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임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 * 추가소요(1.3조원) : 총소요(2.0조원) - 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 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임

19)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20)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중앙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원 분담(안)〉

(단위: 억원)

연 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1년 완성연도	19,951	9,466	1,019	9,466
	100%	47.5%	5.0%	47.5%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9. 4. 9).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함

3. 분석의견

■ 한시적 사업 수행에 따른 이후 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충청남도의 고교 무상교육은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될 것임

〈 충청남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

시기	충청남도 사업대상	중앙정부 사업대상
'19년 2학기	1, 2학년	3학년
'20년	1학년	2, 3학년
'21년	-	전학년

-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한 2019년에 사업대상을 고교 1,2학년 학생으로 한정함
- 충청남도는 2021년부터 교육부문 예산의 운영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발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
- 충청남도 내에서 교육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조사하여 기본권 보장 강화 노력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사업으로 장학사업 등을 확대하여야 함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부록 : 설문지]

No.

--	--

도의회 예·결산분석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도의회 의회를 받아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1월에 신설된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조직(예산분석팀, 예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도의회 예·결산분석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사항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고,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7.

□ 설문관련 문의 : 최웅선 책임연구원 (☎ 010-2208-9705)

1. 충남도의회에 신설된 예·결산 분석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한 조직이다.
- ② 약간 필요한 조직이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다.
- ④ 매우 불필요한 조직이다.

2. 충남도의회에 예·결산분석조직이 2019. 1. 1.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2019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3월)
-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5월)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5월)



2-1 위 2번에서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을 답하신 주요 요인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현재 예산분석 업무 조직은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 2개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1개 상임위원회를 맡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원을 증원하여 별도 과단위로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인원을 증원하여 과단위로 확대 운영하여야한다.
- ②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몇 년간 운영 추이를 보아 결정 한다.
- ③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한다.
- ④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조직의 운영방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위 3번에서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을 답하신 주요 요인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 예·결산분석조직은 향후 제출될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분석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 계획 사항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 성과예산, 도민참여예산, 위원회별 현안사업, 신규사업, 일정기준 이상 증액사업 등 분석

< 상기 추진사항외 추가로 검토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7. 예산 분석·조사를 위하여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 행정부에 필요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충남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은 위법성 내제(입법고문 의견)

경기도는 조례로 자료 요구권 규정

- ① 집행부의 협조·협력을 구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 추진
- ② 지방자치법 제40조 ‘폐회 중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 추진
- ③ 위법성 논란은 있으나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추진
- ④ 기타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제4조(자료요구) ① 도민권익·협치지원·입법정책·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또는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민권익·협치지원·입법정책·예산정책담당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대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최웅선 책임연구원

총괄

□ 내부 연구진

김진영 책임연구원

홍은일 연구원

신혜지 연구원